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경제학회, SSK 지원사업단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경제학회, SSK 지원사업단 심포지엄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

- 일 시 _ 2020년 12월 2일(수), 14:00~18:00
- 장 소 _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_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경제학회, SSK 지원사업단
- 후 원 _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경제학회, SSK 지원사업단 심포지엄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

- 일 시 _ 2020년 12월 2일(수), 14:00~18:00
- 장 소 _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주 최 _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경제학회, SSK 지원사업단
- 후 원 _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초청의 말씀

2000년대에 들면서 경제적 불평등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불평등이 주요 이슈였으나 최근에는 저금리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의 불평등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가 심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커지면 포퓰리즘 수요를 늘리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의 모임인 다보스포럼에서는 양극화 완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있으며, 학계와 정책당국에서도 최저임금 및 조세정책과 더불어 과잉유동성 축소나 주택공급 확대 등 불평등의 원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한국경제학회는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 현황과 영향을 분석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려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부디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김 정 식

한 국 경 제 학 회 회장 이 인 호

프로그램

등 록 (13:30~14:00)

개회식

진행사회: 김광환(연세대)

| | |
|-------------|--|
| 14:00-14:20 | 인사말 김정식(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환영사 이인호(한국경제학회 회장) 축 사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 |
|-------------|--|

[세 선 I] 주제발표

| | |
|-------------|---|
| 14:20-15:40 | • 사 회 : 채희율(경기대) |
| | • 발표 1 : 한국의 불평등 현황과 원인 전병유(한신대) 토 론 : 이경우(연세대) |
| | • 발표 2 : 경제적 불평등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 론 : 박철성(한양대) |
| 15:40-15:50 | 휴 식 |
| 15:50-16:30 | • 발표 3 :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주병기(서울대) 토 론 : 우석진(명지대) |

[세 선 II] 패널토론 :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정책과제

| | |
|-------------|---|
| 16:30-18:00 | • 사 회 : 이종원(성균관대, 전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 토 론 : 김낙년(통국대), 김인철(성균관대), 오정근(자유시장연구원) 이정우(경북대), 이제민(연세대) <p style="text-align: right;">(가나다 순)</p> |
|-------------|---|

목 차

| 주제 발표 |

- 발 표 1 : 한국의 불평등 현황과 원인 1
전병유(한신대)
- 발 표 2 : 경제적 불평등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29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 표 3 :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51
주병기(서울대)
-

[발표 1]

한국의 불평등 현황과 원인

2020. 12. 2.

전 병 유
(한신대)

한국의 불평등 현황과 원인

전 병 유 (한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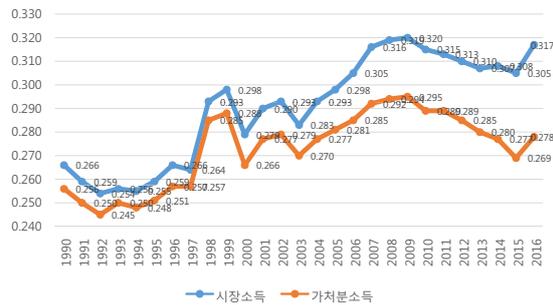
- 가계 소득 불평등
- 노동시장 이중구조
- 자산 불평등
- 세대 불평등

가계소득 불평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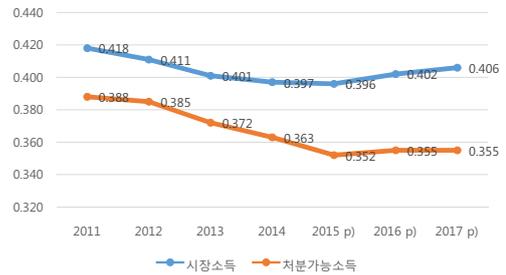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대상과 조사 자료마다 차이는 있지만,
- 1990년대 중반 이후 200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5년까지 다소 감소,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7년 이후 조사 자료의 변경 등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

[그림 1] 지니계수 추이

도시2인 이상 가구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전체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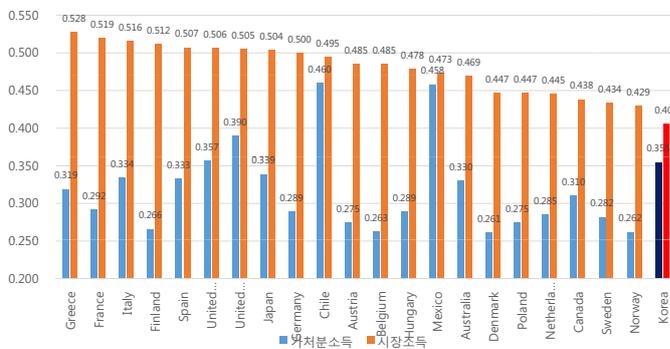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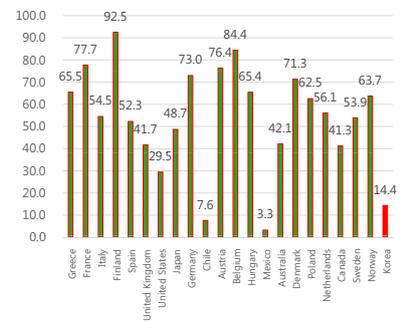
소득 불평등 국제 비교

-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시장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은 낮은 국가인 반면
·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
- 소득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 정도가 OECD 국가 내에서 낮은 수준

[그림 2] 지니계수 (시장 소득 vs 가처분소득, 2017년 또는 2016년)



[그림 3] 지니계수 개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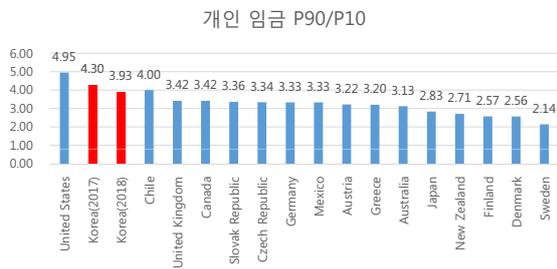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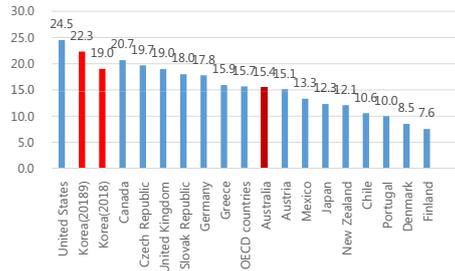
임금 불평등 국제 비교

- 임금불평등은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다소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편임.
- 개인 임금 불평등 수준은 높는데, 가계소득 불평등이 낮은 이유는 저소득 가계의 경우 노동시장참여율이 높기 때문임.
 - 저소득가계의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 → 광범한 저임금노동시장 형성

[그림 4] 풀타임노동자의 P90/P10



[그림 5] 저임금노동자 비율(%), 2017-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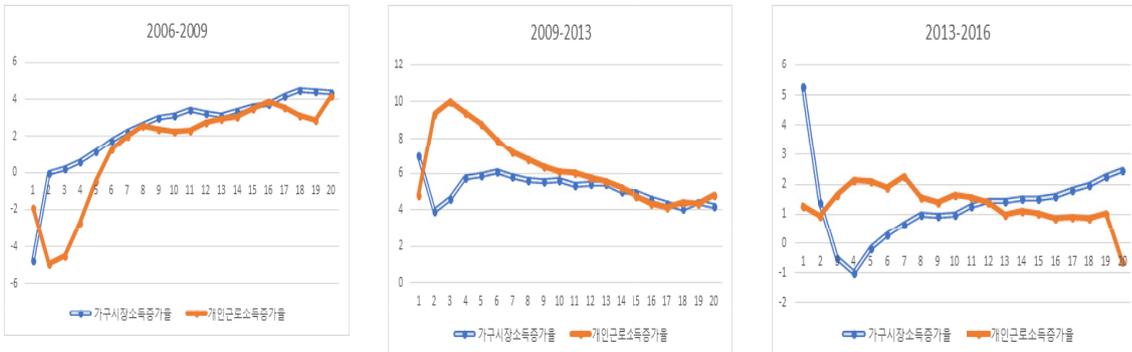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5

노동소득 불평등 완화를 통한 가계소득 불평등 개선의 가능성

- 그러나, 2013년 이후 개인근로소득불평등 완화가 가계근로소득불평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는 노동시장 하층의 임금소득 개선만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의미함.
 -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전체 가계소득의 개선을 다 이루어낼 수 없다는 의미

[그림 6] 20분위별 개인근로소득증가율과 가구시장소득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단위:%,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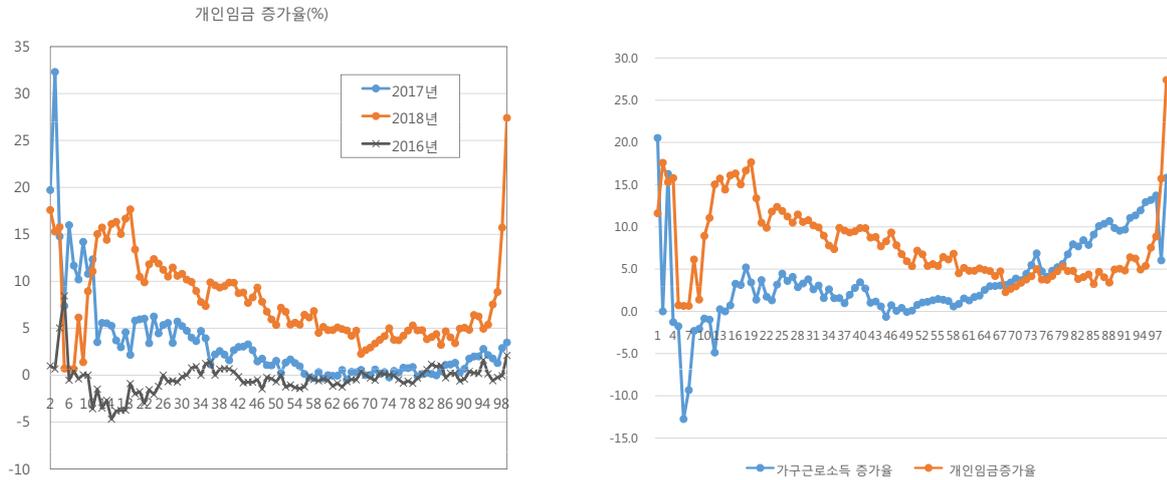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6

노동소득 불평등과 가계소득 불평등

- 분위별 개인임금증가율과 가계소득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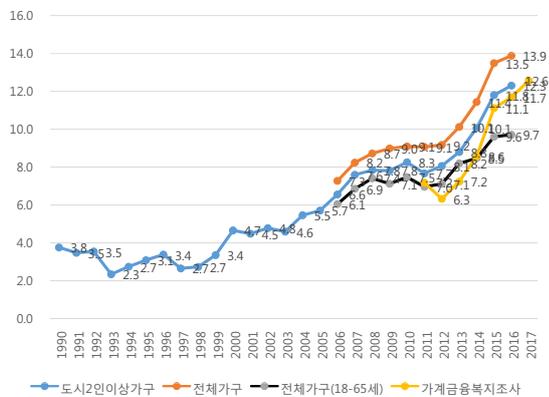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7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의 개선

- 2000년 이후 지니계수 개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 2013년 이후 개선율 증가는 기초연금 시행 등이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지니계수 개선율=(시장지니-가처분지니)/시장지니*100 (가계동향조사)



-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불평등 개선 정책과 재분배를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
 - ex) 최저임금과 EITC의 결합

8

초고소득자 문제 vs 저소득 빈곤 문제 vs 20대80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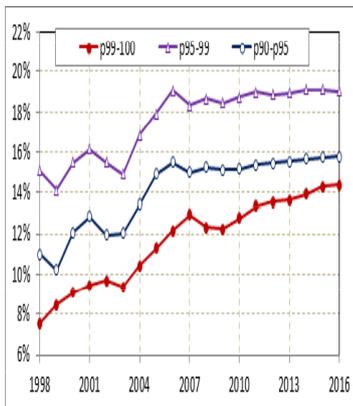
- 소득불평등 현상과 원인은 매우 복잡적임.
- - 상위 1%, 10% 등 초고소득자의 소득점유율이 상승하는 것도 확인되고 있음.
 - 그러나, 소득 하위 20%의 빈곤층 문제도 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해소되지 않고 있음.
 - 노동시장에서 상위 20%(대기업정규직)와 하위 80%(중소기업 비정규직)이라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심각한 수준
- 한국 사회에서 어떤 현상이 가장 핵심이고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인가 ?
- 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자료의 한계도 존재함.
- 개인적 판단으로는,
 - 20대80이라는 노동시장이중구조의 문제(대중소기업간 격차와 비정규직의 문제)
 - > 하위 20%빈곤 문제
 - > 상위 10%의 과도한 소득의 문제
- 다만, 20대80의 문제는 복합적인 정치경제적 원인을 가지고 있고, 복합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정치적 해결도 쉽지 않은 문제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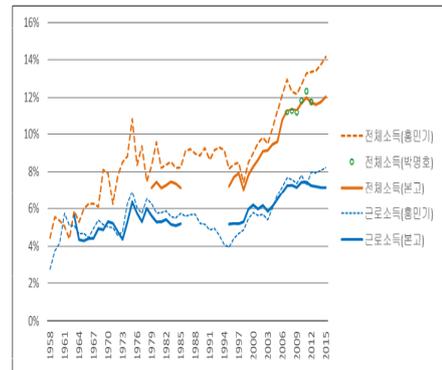
초고소득층(상위 1% 또는 상위 10%)의 소득

- 가계조사자료의 경우, 상위고소득층을 파악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를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정할 경우, 상위 고소득층을 보정한 지니계수는 2008년 이후에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8] 상위 1%, 5%, 10% 소득 점유율(홍민기(2017))



김낙년(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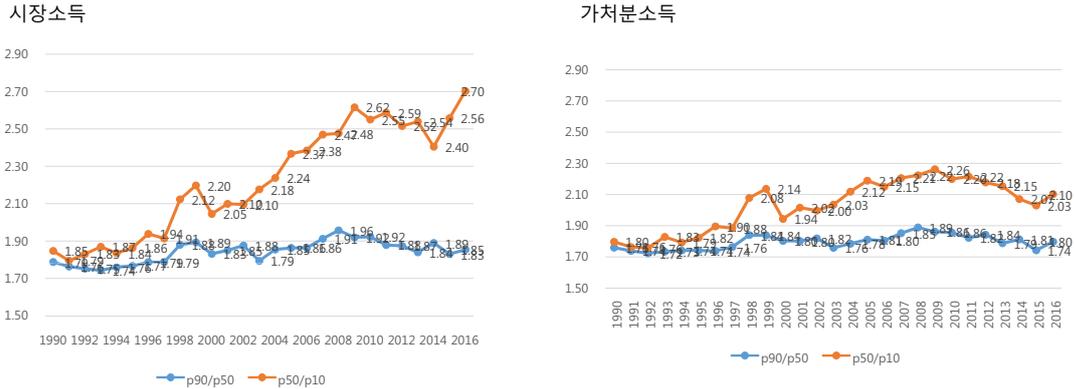
자료: <부표 1, 2>; 박명호(2014); 홍민기(2015a, 2015b).

10

저소득층의 소득 추세

-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하위 10분위와 중위 50분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소득층 문제를 보정할 경우, P90/P50도 더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P10과 P50의 격차가 벌어진 것은 사실임.
 - 다만, 가처분소득의 경우 격차가 줄어들. 조세와 이전소득에 의한 재분배효과가 강화된 것도 사실임.

[그림 9] 분위별 소득 배율 추이(가계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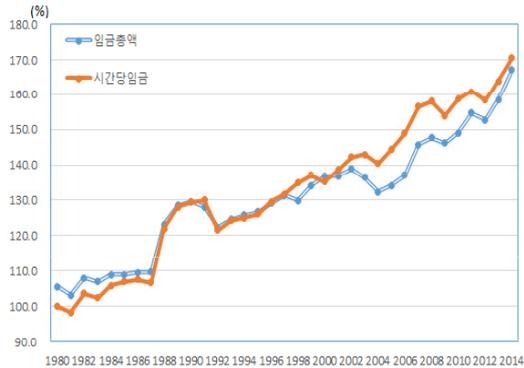
11

- 가계 소득 불평등
- 노동시장 이중구조
- 자산 불평등
- 세대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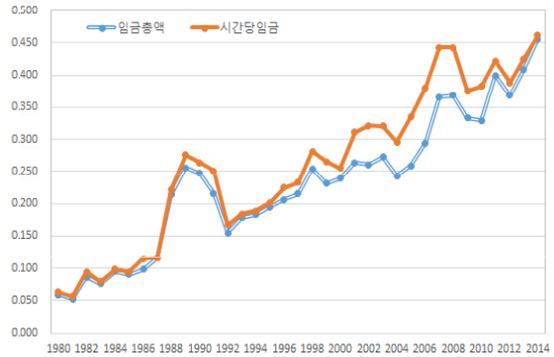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는 1987년, 1997년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그림 10]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임금구조기본조사)
(10~299인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



대규모 사업체 임금프리미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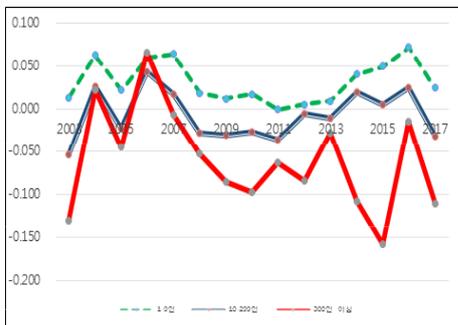
13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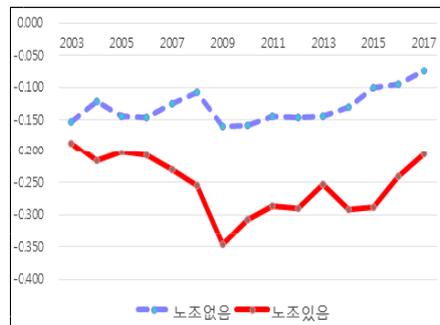
-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기간제법이 통과된 2007년 이후 전체적으로 통제되는 듯하지만, 대규모사업체에서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보임.

[그림 11] 사업체규모별, 노조유무별 비정규직 부(-)의 임금프리미엄(경찰부가조사)

사업체규모별



노조유무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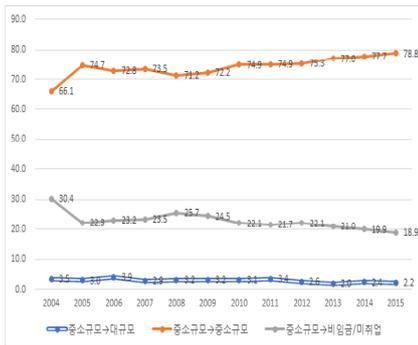
14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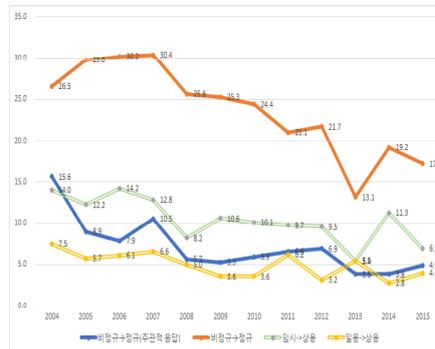
- 기업규모별, 고용형태별 노동이동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노동시장이 철저히 분단되어 있음을 나타냄.

[그림 12] 고용형태별, 종사상지위별, 사업체규모별 노동이동(1년 후 고용지위 변화) (노동패널)

규모간 노동이동



고용형태별 노동이동



15

대기업-공공부문의 정규직 규모

- 상위 20%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공공부문의 정규직 규모는 400-450만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표 1> 2016년 기준 대규모 사업체, 대규모 기업체, 공공부문 고용 현황

| | | (만 명) | 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
|-----------------------------|--------------------------------|------------|-----------------|----------------|
|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체 취업자 | 2,653 | 100.0 | |
| | 임금근로자 | 1,963 | 74.0 | 100.0 |
| | 300인 이상 사업체 | 244 | 9.2 | 12.4 |
| 고용형태 공시제 | 300인 이상 기업체(고용형태공시제) | 381 | 14.4 | 19.4 |
| | 300인 이상 기업체 정규직 | 291 | 11.0 | 14.8 |
| | 300인 이상 기업체 기간제 | 90 | 3.4 | 4.6 |
| | 300인 이상 기업체 기업 외 파견/용역/사내하청 | 93 | 3.5 | 4.7 |
| 일자리 행정통계 | 공공부문 | 232 | 8.7 | 11.8 |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 | 공공부문 | 185 | 7.0 | 9.4 |
| | 정규직 | 132 | 5.0 | 6.7 |
| | 무기계약 | 21 | 0.8 | 1.1 |
| | 기간제 | 19 | 0.7 | 1.0 |
| | 파견용역 | 12 | 0.5 | 0.6 |

16

참고: 가계소득 관련 자료의 문제

- 가계소득 관련 조사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음.
- 가계동향조사
 - 표본의 한계(고소득자 대표성 문제 등)와 조사방법(가계부조사, 지출조사부담 등)으로 2017년 폐지하기로 함.
 - 2017년 규모를 축소하여 가계소득조사
 - 2018년 규모를 다시 8,000가구로 확대하여 조사 (조사방법은 설문조사)
 - 2018년부터 모집단이 2015년 인구총조사로 대체됨(1인가구, 노인가구 비중 증가)
 - 2019년 이후 조사에서는 모집단 쟁점이 통제되는 자료로 기대됨.
 - 2020년부터 2017년 이전 조사 방식으로 복귀
- 가계금융복지조사
 - 조사 규모 확대하여 2012년부터 조사 (2010-2011 가계금융조사)
 - 고소득층의 과소보고, 과소응답의 문제를 행정자료(과세자료)로 보완
 - 자료 공개 시점이 1년 이후로 늦다는 문제

17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정책 대응과 과제

노동시장 분절화의 정책적, 정치적 시사점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분절화 → 사회적 보호의 이중화 → 정치적 이중화

- 중도 사민당의 “내부자-외부자 딜레마”(Rueda, 2014)

“내부자의 이해를 따라갈 경우 외부자들이 극단적인 정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외부자의 이해를 대변하자니, 전통적 내부자의 지지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내부자-외부자 딜레마”(Rueda, 2014)

- 그러나, 노동시장의 지위나 이중화, 분절화보다는 가계 소득이 정치적 선호, 노동정치와 복지에 대한 태도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음(Cavaille, 2014)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정치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노동계급 내부에서 복지정책 하위 영역에 대한 상이한 태도가 관찰(서재욱·김윤태, 2014)

- 하층계급일수록 복지태도가 일관적이지 않음(김영순, 여유진, 2011).

19

3. 노동시장 분절화의 정책적, 정치적 시사점

- “노동의 연대와 보편주의적-포괄적 정책 설계의 선순환”(Doellgast et al. 2018)

노동의 연대 → 보편주의 → 노동의 연대

- 우선순위: **보편주의 or 노동연대**, 사회적 비용과 단기 효과성 측면→보편주의 우선?

- 단, 이념적 보편주의의 한계는 재검토

·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수당 ⇒ 최하위 빈곤계층의 상대적 소외
(하위 10% 가계의 일자리기회감소, 이전소득 감소)

- 보편주의의 재구성

· 노동시장 내부-외부 하위 계층의 고용-복지에 더 세심한 타게팅

20

3. 노동시장 분절화의 정책적, 정치적 시사점

- 내부노동시장확장 전략(상위 20%의 확대, 상층과 중층의 격차 완화)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불공정원하청거래 해소, 차별시정
- 사회적 노동시장체제: 산별교섭, 초기업수준의 임금결정, 직무형임금
 - 노동조합의 임금평등화 효과 2000년 이후 오히려 감소. 기업이 산별교섭의 인센티브가 없음.
 - 초기업적 횡단적 임금을 설정
 - 지역-업종별 접근, 사회적 합의 or 정부주도개입, 정치적 타결, 직무형노동시장
- 민간 대기업 부문 노동시장 개혁
 - 근로시간단축-일자리나누기
 - 임금직무 혁신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분절화와 격차 실태 파악(고용안정과 생애임금까지 고려)
 - 분절화 초기로 판단됨. 이에 대한 정부 주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 공공부문의 임금직무 혁신 등

21

3. 노동시장 분절화의 정책적, 정치적 시사점

- 중층-하층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대의 전략
 - 잘 준비된 세심한 최저 임금 인상 전략
 - 자영업-영세기업과의 제로섬 게임, 미취업과의 제로섬 게임(고용기회 약화)에의 대응과
 - 중층의 최저임금수용성 제고
 - * 2017-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노동자 중심의 노동시장은 개선 경향
 -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 비중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는 21.5%에서 15.7%로 감소하고,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는 20.5%에서 17.9%로 감소.(김유선, 2018).
 - 2015년 기준 OECD 평균 수준 16.6%에 근접.
 - 중소기업-자영체제의 생산과 자산 기반을 보호·확충하는 방안과 연계
 - 가격전략(최저임금)과 소득전략(소득보장정책, EITC, 실업부조, 기초연금, 기초생보 등)의 정교한 결합 필요
- 재분배 정책
 - 지니계수 개선율을 높이고 노인빈곤율을 완화할 필요는 있음.
다만, 국민연금 등의 확대 전망 등을 적절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근로연령대 소득 보장의 문제
 - 전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 쟁점과 과제는 추후에...

22

- . 가계 소득 불평등
- . 노동시장 이중구조
- . 자산 불평등
- . 세대 불평등

자산불평등 관련 쟁점

- 자산축적 요인
 - 소득과 저축(Saving)
 - 자산가격 상승(자본이득과 지대)
 - 상속과 증여
- 자산불평등 원인
 - Picketty: Capital is Back!
 - Stiglitz의 지대(rent) 이론
 - Branco Milanovich의 Working Rich 가설(신자본주의)

피케티의 세습자본주의?

- Picketty(2014): Capital is Back!

$r > g \rightarrow \beta \text{ 증가} \rightarrow \alpha \text{ 증가} \rightarrow \text{세습자본주의}$

r = 자본수익률

g = 경제성장률

β = 소득 대비 자본 비율

α = 자본분배율

- 피케티는 선진국의 경우 향후 $r=4-5\%$, $g=1.5\%$ 로 예측
- 한국의 경우 $r=4.5-6.5$ $g=3\%$ 전후

- 한국 β 값이 매우 높음.

- 과거 높은 저축률
- 최근 높은 높은 자본이득(부동산 가격 상승)에 기인

25

Stiglitz의 Wealth Residual

- 3가지의 퍼즐

- β 가 증가하는데도, 이자수익률이 하락하지 않고 임금은 정체
- 부(wealth)가 증가하는데 노동분배율은 하락
- 저축은 감소하는데, β 는 증가

- 자본과 자산의 구분이 필요

Wealth Residual = 자본으로 설명되지 않는 자산
이를 유발하는 것은 지대(Rent)

- Rents

- 토지 지대
- 착취 지대(독점기업이나 금융부문의 지대)
- 지적재산권의 지대 부문

26

지대추구와 불평등

- 지대추구: 정치권력의 불평등과 기득권의 문제
 - 지대추구행위는 기득권집단이 권력을 이용하여 법과 제도를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
- 미국에서의 경제적 지대추구 현상들
 - 기업-노동(이윤율>이자율)
 - 시장 독점도의 증가
 - 금융부문의 과도한 수익과 보수
 - 주택가격>건설비용
 - 국가자격증(미국 1950년 5%-> 2008년 28%)
(The US Economic Report of President 2016).

27

Working Rich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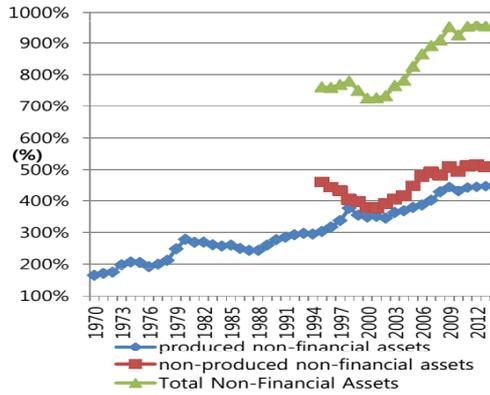
- 자산가격상승보다는 상위 1%의 저축증가가 자산 불평등을 증가시킨 것
이른바 Working Rich 들이 자산도 더 많이 축적
- 높은 근로소득자와 높은 자본소득자가 점점 더 일치(Lakner and Atkinson, 2014)
- 상위 1%에서 근로소득의 비중 증가(Piketty and Saez, 2014)

고소득부모는 저축과 주식투자로 엄청난 자본축적,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은 소득을 획득, 자녀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자녀가 막대한 자본자산을 물려받을뿐만 아니라 고소득 직업까지 가지게 되면, 불평등은 2세대 이상 세습(Branco Milanovi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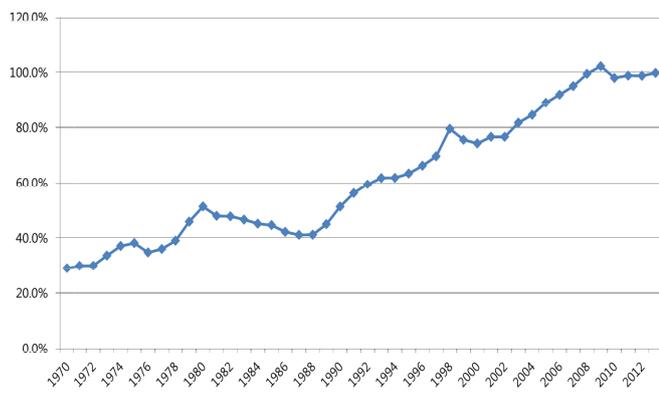
28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

[그림 13] 소득대비 순자산 추이(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그림 14] 국민순소득 대비 부동산자산총액 추이(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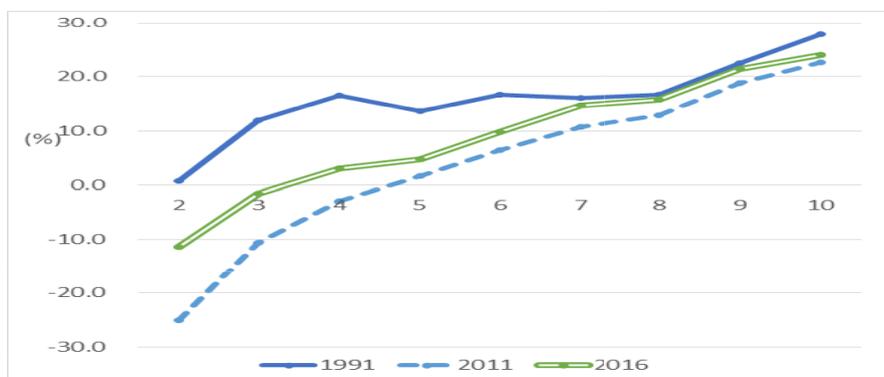


29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 저축

- 저축률이 90년대부터 크게 하락,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률 하락

[그림 15] 소득분위별 저축률 추이(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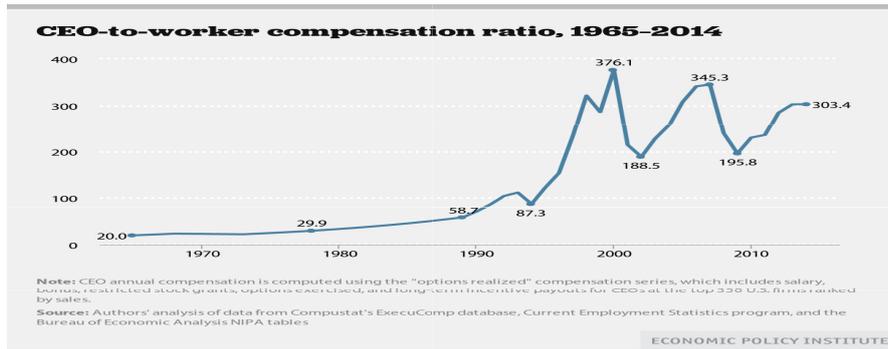


30

지대추구와 불평등

- 주요 대기업 임원 연봉이 근로자평균임금의 100-200배를 넘음
 - 2015년 등기임원 연봉, 삼성전자 66.6억, CJ제일제당 33.6억, SK이노베이션 29.6억, 현대차 28.8억,
 - 5억 이상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은 748명
 - 근로자평균연봉 3281만, 중위연봉 2500만원(2015년)
 - 대기업 정규직 평균연봉은 6544만원(소득상위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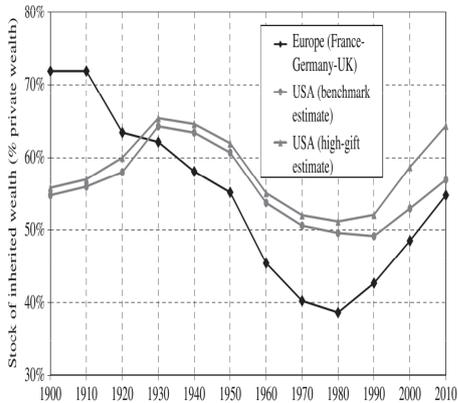
[그림 16] 미국 근로자 연봉 대비 CEO 연봉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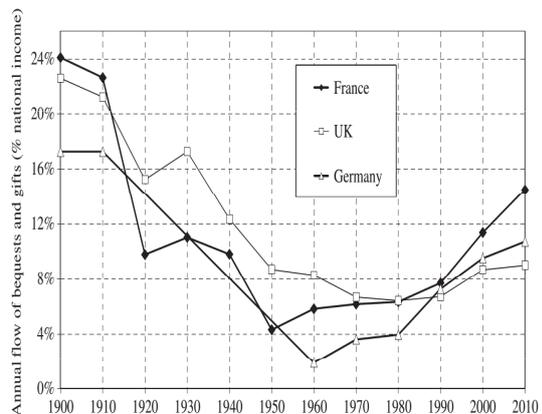
자산축적의 동인: 상속과 증여

[그림 17] Share of Inheritance and bestowal in Wealth (1900-2010)



Source: Alvaredo et al.(2017)

[그림 18] Share of inheritance gift in national income (Europe and USA, 190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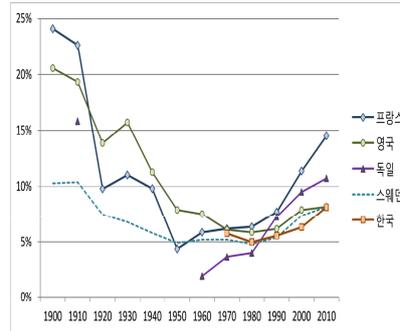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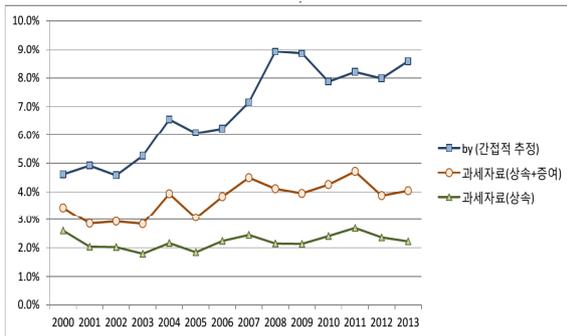


32

Drivers of Wealth Accumulation: Savings, Capital Gains, Inheritance

- 상속이 전체 자산의 20% 수준(홍민기 2017, 박가연, 홍백의 2017)
- 상속증여는 국민순소득의 8% (김낙년, 2015)

[그림 19] 국민순소득 대비 연간상속액의 비중(김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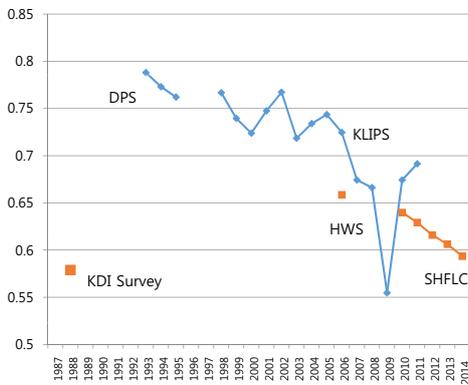


33

자산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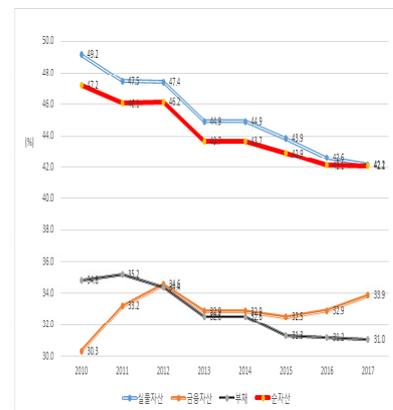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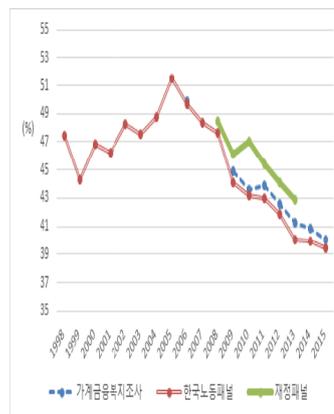
공식통계자료와 서베이자료에 따르면, 자산불평등은 외환위기 이후 2005년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림 20] 자산 지니계수 추이



출처: 대우패널조사, KLIPS=한국노동패널조사, HWS=가계자산조사, SHFLC=가계금융복지조사

[그림 21] 자산불평등 추이(순자산 상위 10% 점유율, 가계금융복지조사)



34

자산 불평등

[그림 22] 자산불평등의 국제 비교 (순자산 상위 1%, 5%, 10% 점유율과 평균 대비 중간값, OECD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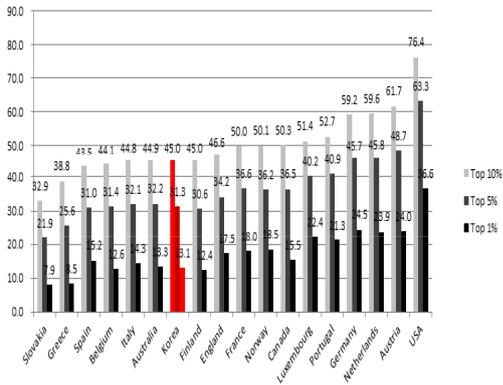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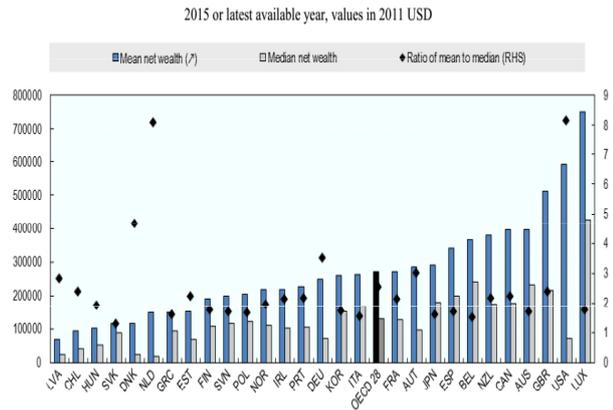


Figure 2.3. Mean and median net wealth per household and ratio of mean to me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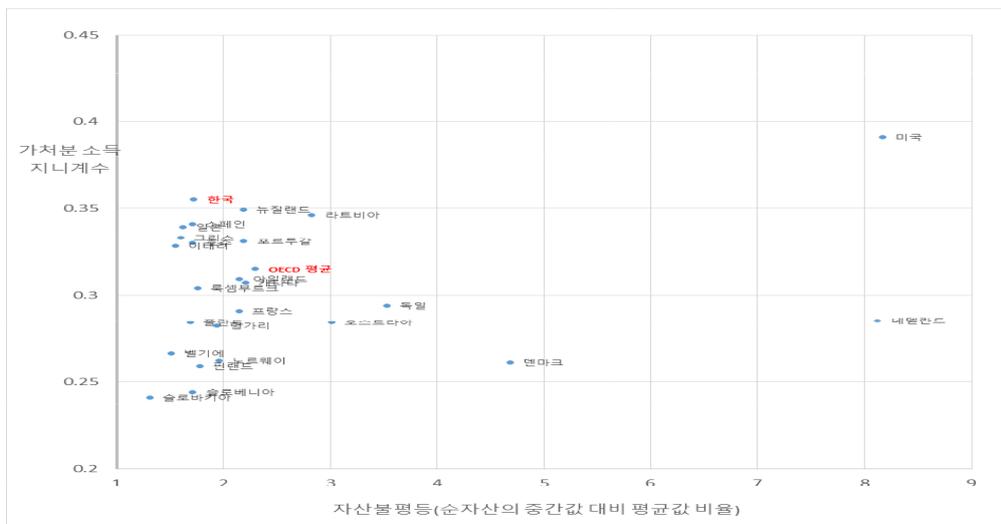


자료: Balestra, C. and R. Tonkin (2018)

35

자산 불평등

[그림 23] 가처분소득 불평등과 순자산 불평등 국제 비교



36

세습자본주의?

- 우리나라 가계자산 불평등이 낮은 이유
 - 실태조사로 파악되지 않는 자산 약 1200-1300조
 - 토지개혁, 한국전쟁의 역사적 유산
 - 취약한 국가복지에 대한 대응(일종의 보험/연금)
 - 높은 자영업자 비율
 - 보이지 않는 상속과 증여
 - 자산을 법인용으로 등록하는 관행

| | 국민대차대조표 (2013년말 기준, A) | 가계금융복지조사 (2014년 3월조사, B) | B/A |
|-------|---------------------------|-----------------------------|------|
| 총자산 | 7,586 | 6,137 | 0.81 |
| 비금융자산 | 4,912 | 4,494 | 0.91 |
| 금융자산 | 2,674 | 1,643 | 0.61 |
| 순자산 | 6,366 | 5,034 | 0.79 |
| 부채 | 1,220 | 1,103 | 0.90 |

37

지대추구와 불평등

-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임대소득과 매매차익 소득은 이병희 외(2016)의 추정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최대치로 약 65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국세청 통계에서 2013년 현재 10조원만 파악되고 있음

[그림 24] 부동산 소득 추정(2013년)

| | 전체 | 개인 |
|---------------|--------|-------|
| 상업용부동산 영업소득 | 227.3조 | 53조 |
| (상업용부동산 임대소득) | 107.7조 | 25.3조 |
| 주택 매매차익 | | 7.8조 |
| 토지 매매차익 | | 약 15조 |

[그림 25] 국세통계 기준 재산소득(2013년)

| 전체 재산소득(조원) | 72조 |
|-------------|-----|
| 이자 | 39조 |
| 배당 | 15조 |
| 연금 | 8조 |
| 부동산 | 10조 |

자료: 이병희 외, 경제적 불평등 실태와 정책대응, 한국노동연구원 2016

38

자산정책

- 자산은 불로소득의 측면이 있어 소득불평등보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함.
 - 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은 지원해야 하지만,
 - 지대(불로소득)나 세습증여를 통한 자산 형성은 억제될 필요가 있음
 - 고소득자(working rich)가 자산형성으로 이어지는 고리(인적자본투자의 불평등, 주거의 불평등)도 제될 필요가 있음.
- 일차적으로는 자산 가격의 안정화가 가장 중요
 - 금융에 대한 적절한 규제 시스템 구축 : 자산의 금융화 억제
 - 주택임대소득세, 과세표준을 통한 보유세 강화
- 다만, 규제 중심이 아니라 공유자산을 확대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조치도 필요
 - 재산소유 민주주의(소득-세금, 부채 이외의 제3의 수단(James Meade, J. Schumpeter)
 - 시장경제 활동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지속적인 현금흐름 창출
 - 일정 정도 사회적 통제를 하기 위한 지렛대로 공유(국유)자산을 활용
 - 각종 자산을 활용하여 공적 활동과 서비스를 위한 기금 마련이나 투자 재원으로 활용
 - 국부펀드 운영하는 공적투자기관의 설립
 - * 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국가의 순자산을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공공투자기관 설립(Atkinson)
 - ※ 2008년 프랑스의 전략적투자기금 (공익서비스 부문의 장기투자), 영국의 자녀신탁기금, 텍사스 퍼머넌트 스크 펀드
- 국가상속제로서 청년 대상 기본자산제 등을 검토

39

- . 가계 소득 불평등
- . 노동시장 이중구조
- . 자산 불평등
- . 세대 불평등

세대 불평등

- 세대 불평등 이슈 등장
 - 이철승(2019), 세대의 불평등, -조귀동(2019), 세습 중산층
- 세대 간 불평등은 그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 갈등을 반영하는 논쟁적 이슈
 - 청년 실업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 경제위기(경기변동)가 초래하는 효과의 지속성의 문제
 -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문제
 - 교육 확대의 유효성의 문제 등
- 새로운 코호트는 안전성에 대한 위협이면서도 사회변동을 위한 새로운 기회
 - '인구학적 신진대사(demographic metabolism)'(Ryder 1965, 843)가 사회변동의 원동력
 - 사회변동을 연령과 시기 효과로만 바라보는 지적인 안이함을 비판

41

세대 불평등

- 세대 간 불평등의 현상 자체는 연령, 시기, 세대라는 세 가지의 시간 차원이 서로 착종하면서 전개
 - 청년 실업의 문제는 '연령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세대의 문제'일 수도
 -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대 내 이질성이 증가하는 현상도 고려해야
- 세대 효과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연령과 시기의 효과를 적절하게 통제해야
 - 연령, 시기, 코호트를 독립 변수로 모두 포함하는 회귀 모델, 이른바 APC 모델로 추정해야
- 그러나, '코호트=시기-연령' 때문에, 회귀분석에서는 식별(identification)의 문제가 존재
 - 특정 시점의 횡단면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령과 코호트 효과가 서로 섞여 구분되지 않고, 특정 코호트에 대한 종단적인 패널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령과 시기 효과가 구분되지 않는

42

세대 불평등

▪ Chauvel(2013)이 제안한 APCD(APC-Detrended) 모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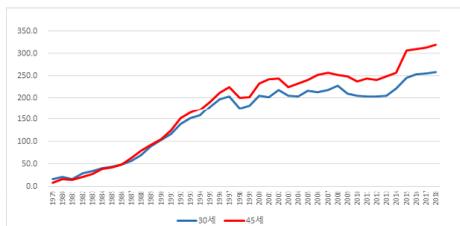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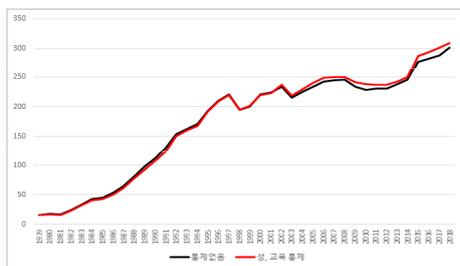
- 세 변수의 추세를 제거하여 코호트 간 차이를 비선형적으로 보는 것
- 선형 추세(linear trends)와 변동(fluctuations)을 구분
- APCD는 해당 기간 코호트 간 상대적 차이를 나타내지만 절대적인 차이는 나타내지는 못함
- APCD 모형에서 '코호트의 제로 기울기(rescale(c)=0)'라는 제약 조건을 제거하는 APCT 모형은 절대적인 차이를 보여줄 수 있음.
- 다만, 그 효과가 코호트 효과인지 시기 효과인지 구분은 불가능.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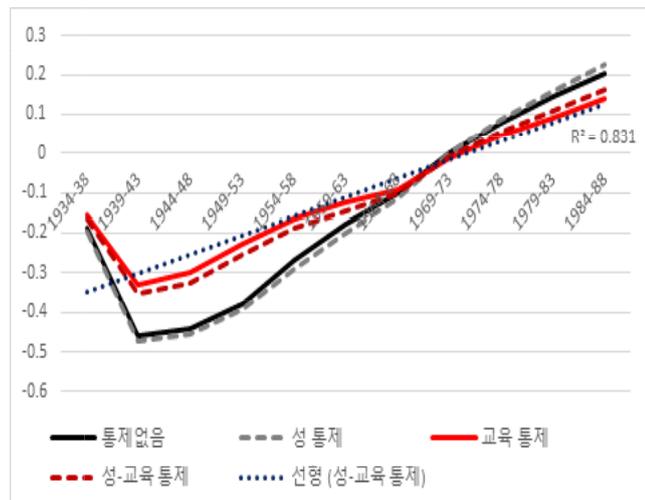
세대 불평등

[그림 4-1] 월총액임금(실질임금)에 대한 OLS 선형회귀모형과 APCT의 연령 효과와 코호트 효과 추정치

OLS 모델: 월총액임금 로그값의 시기 효과 (1978-2018)



APCT: 코호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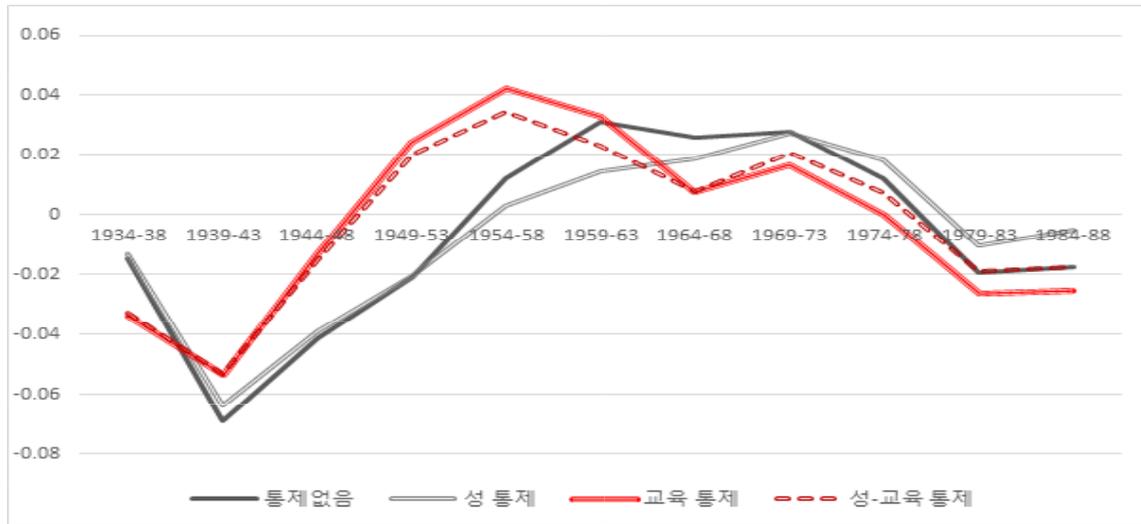


44

주: OLS 모델에서 Y축은 기준 시기(1978년) 대비 % 차이를 나타내는 선형회귀계수이며, $\exp(\beta) - 1$ * 100로 계산하였고, X축은 측정 시기임. APCT 모델에서 Y축은 APCT 회귀계수이며, X축은 APC 요인들임.

세대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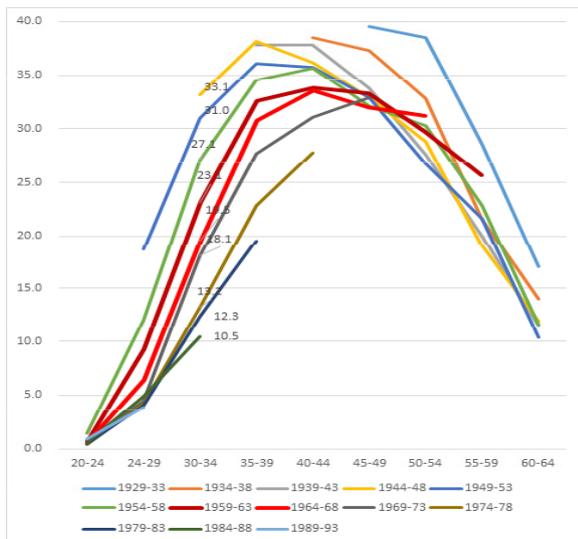
[그림 4-2] APCD 모델: 월평균임금총액의 코호트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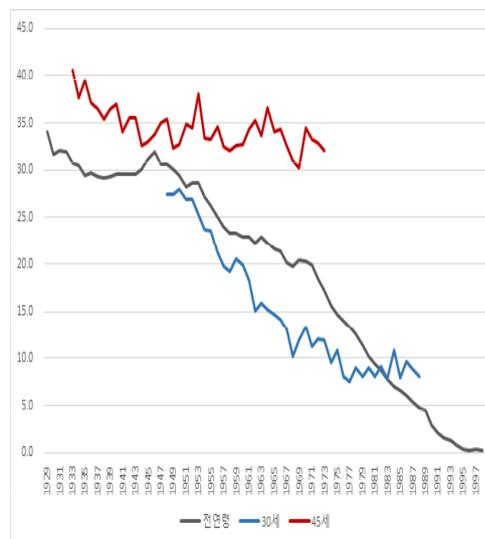
45

세대 불평등

[그림 4-3] 코호트별(출생 연도별) 연령에 따른 상위 20%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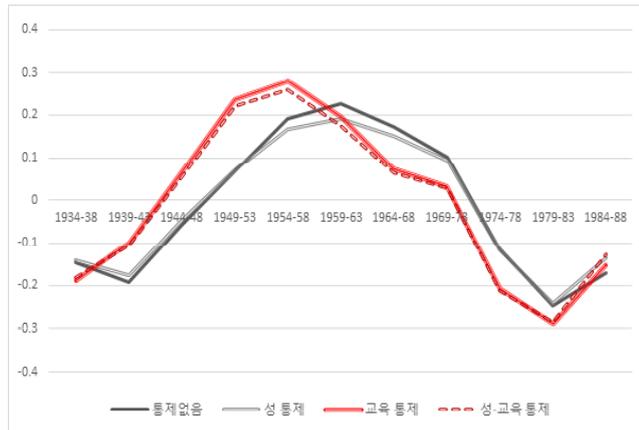
[그림 4-4] 코호트별 상위 20% 점유율(30세와 4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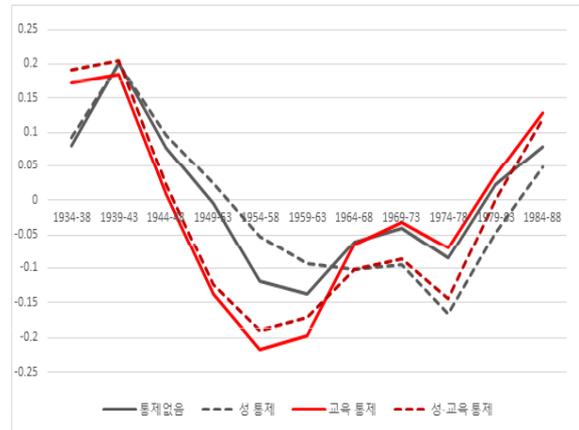
46

세대 불평등

[그림 4-5] 상위 20% 점유 확률에 대한 코호트 효과: APCD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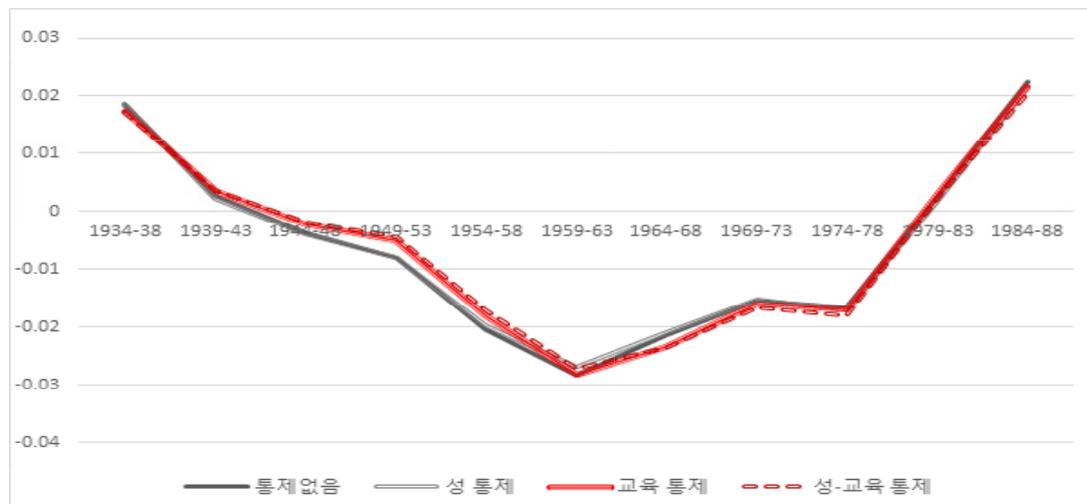
[그림 4-6] 하위 20% 점유 확률에 대한 코호트 효과: APCD 모델



47

세대 불평등

[그림 4-7] 불평등 지수에 대한 코호트 효과: APCD 모델



48

감사합니다.

49

[발표 2]

경제적 불평등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2020. 12. 2.

윤 덕 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적 불평등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2020. 12

윤 덕 통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목차

1. 문제제기
2. 한국에서 부의 불평등 추이와 거시경제적 영향
3. 자산가격 변화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4. 소득 불평등이 대외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5. 결론

KIEP 2



1. 문제제기

-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부정적 역할
- 경제적 불평등이 주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됨



2. 경제적 불평등과 그 영향

- 1990년대 초기 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유인효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이라는 실증연구 결과 제시 (Alesina & Rodrik(1994), Persson and Tabellini(1994) 등)
- 2010년 이후 연구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주목(OECD(2014, 2015), IMF(Ostry et al. 2014)
- 경제적 불평등연구는 ‘소득 불평등’ 중심에서 ‘자산불평등’ 으로 관심을 이동 (Rajan(2010), Bordo & Meissner(2012), Kumhof et al.(2015)



가구 자산 및 부채와 순자산

[단위 : 만원, %]

| | 실질순자산 (만원) | 명목순자산(만원) | | | | | | |
|------|---------------|-----------|--------|--------|--------|-------|-------|-------|
| | 실질 | 명목 | 자산 | 금융자산 | 실물자산 | 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
| 2010 | 25,333 | 23,066 | 27,684 | 5,886 | 21,798 | 4,618 | 3,151 | 1,468 |
| 2011 | 25,930 | 24,560 | 29,765 | 6,903 | 22,862 | 5,205 | 3,597 | 1,608 |
| 2012 | 27,767 | 26,875 | 32,324 | 8,141 | 24,184 | 5,450 | 3,684 | 1,766 |
| 2013 | 27,365 | 26,831 | 32,688 | 8,827 | 23,861 | 5,858 | 3,974 | 1,884 |
| 2014 | 27,682 | 27,488 | 33,539 | 9,013 | 24,526 | 6,051 | 4,118 | 1,933 |
| 2015 | 28,429 | 28,429 | 34,685 | 9,290 | 25,396 | 6,256 | 4,361 | 1,896 |
| 2016 | 29,631 | 29,918 | 36,637 | 9,638 | 26,999 | 6,719 | 4,721 | 1,998 |
| 2017 | 30,673 | 31,572 | 38,671 | 10,056 | 28,616 | 7,099 | 5,041 | 2,058 |
| 2018 | 32,592 | 34,042 | 41,573 | 10,512 | 31,061 | 7,531 | 5,446 | 2,085 |



그림. 가계순저축률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검색일: 2019. 11. 5).



표. OECD 주요국의 가계저축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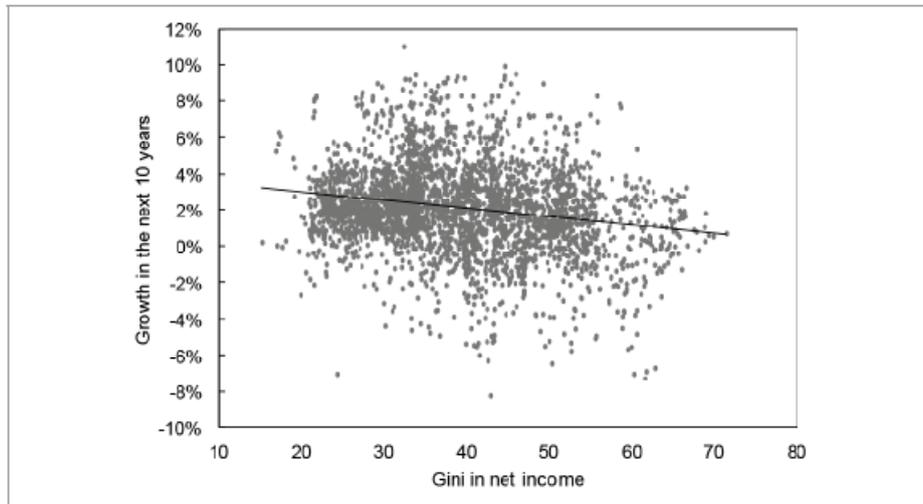
| 국가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5 | 2017 |
|------|------|------|------|------|------|------|------|------|------|------|------|------|------|
| 영국 | 2.8 | 2.4 | 3.5 | 2.9 | 6.4 | 6.5 | 4.5 | 4.5 | 3.7 | 3.6 | 4.6 | 1.6 | -0.9 |
| 폴란드 | 2.2 | 2.0 | 2.1 | 0.3 | 2.8 | 2.4 | -1.1 | -1.1 | -0.1 | -0.4 | -0.4 | 1.5 | -0.9 |
| 일본 | 3.7 | 2.7 | 2.8 | 2.7 | 4.2 | 3.9 | 4.2 | 2.9 | 0.6 | 0.1 | 1.4 | 3.1 | 2.7 |
| 이탈리아 | 9.1 | 8.5 | 8.1 | 7.8 | 7.1 | 4.2 | 3.7 | 2.0 | 3.6 | 3.9 | 3.2 | 3.2 | 2.3 |
| 캐나다 | 1.5 | 2.6 | 2.2 | 3.4 | 4.7 | 4.4 | 4.3 | 4.8 | 5.3 | 3.6 | 4.2 | 1.3 | 1.8 |
| 헝가리 | 8.0 | 8.6 | 4.4 | 3.7 | 5.5 | 6.1 | 7.0 | 5.2 | 7.1 | 8.0 | 6.2 | 8.1 | 7.3 |
| 호주 | 0.3 | 0.8 | 2.5 | 8.9 | 6.8 | 8.4 | 8.8 | 7.5 | 7.9 | 7.9 | 6.0 | 4.9 | 3.5 |
| 미국 | 3.3 | 4.0 | 3.9 | 5.2 | 6.3 | 6.8 | 7.4 | 9.1 | 6.6 | 7.6 | 7.8 | 6.9 | 6.9 |
| 한국 | 6.0 | 4.9 | 3.2 | 3.3 | 4.2 | 2.8 | 2.2 | 2.8 | 4.5 | 5.9 | 8.4 | 7.5 | 6.5 |
| 프랑스 | 8.5 | 9.0 | 9.4 | 9.3 | 10.6 | 10.5 | 9.9 | 10.0 | 8.5 | 8.9 | 8.4 | 8.2 | 8.5 |
| 독일 | 10.1 | 10.1 | 10.2 | 10.5 | 10.0 | 10.0 | 9.6 | 9.3 | 8.9 | 9.5 | 9.7 | 9.8 | 9.9 |
| 스웨덴 | 5.4 | 7.1 | 9.5 | 11.8 | 11.0 | 11.8 | 12.5 | 14.4 | 15.0 | 16.4 | 15.0 | 16.0 | 15.1 |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검색일: 2019. 11. 11).



4. 경제적 불평등과 거시경제적 영향

그림. 지니계수와 향후 10년 평균성장률(순소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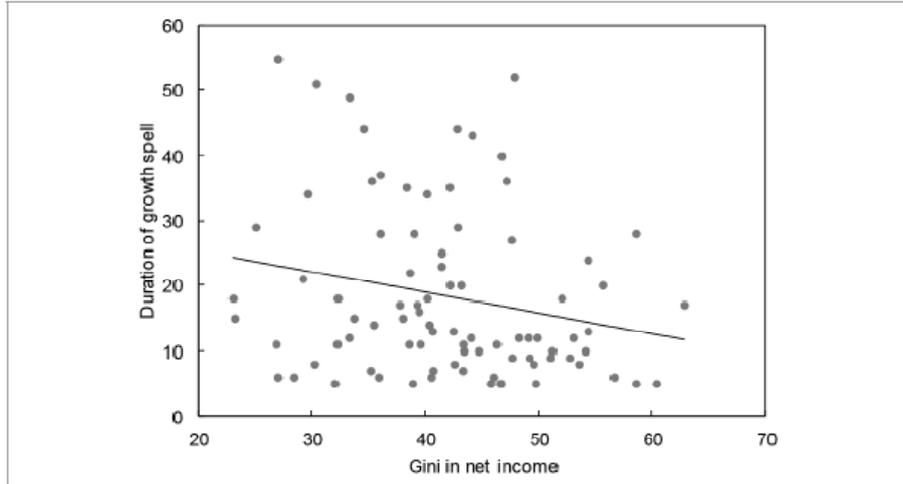


자료: Berg et al.(2018), p.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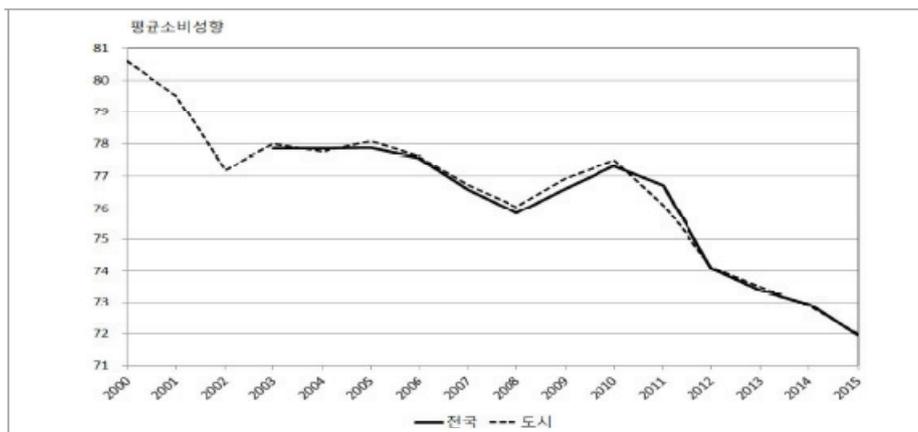
그림. 지니계수와 성장의 지속(순소득 기준)



자료: Berg *et al.*(2018), p. 269.



그림. 평균소비성향 추이



자료: 김진웅, 노영진(2017), p. 43.



4. 경제적 불평등과 거시경제적 영향

➤ 소비함수 추정

- 자료: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1990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의 분기데이터 사용
- 분석모형: 임병인,윤재형(2014)의 소비함수모형에 배미경(1998)의 가계의 특성을 반영.

$$IC_i = \alpha_1 \log ECY_i + \alpha_2 age_i + \alpha_3 age^2_i + \alpha_4 emp_i + \alpha_5 dum_i + \epsilon_i$$

- 종속변수: IC (로그 소비지출)
- 설명변수: IECY (로그 균등화 경상소득), age (나이), age2 (나이제곱), emp (취업인원수),
- 더미 변수: 성별 (sex), 직업 (job), 교육수준 (school)



표. 전체 기간과 전체 소득 대상 소비함수 추정 결과

| 변수 | Coef. | Std. Err. | t | P>t | [95% Conf. Interval] | |
|-------------------------|----------------------|-----------|--------|------|----------------------|--------|
| <i>logECY</i> | 0.583*** | 0.002 | 343.9 | 0.00 | 0.580 | 0.586 |
| <i>Emp</i> | 0.0378*** | 0.001 | 30.76 | 0.00 | 0.035 | 0.040 |
| <i>age</i> | 0.0426*** | 0.001 | 83.11 | 0.00 | 0.042 | 0.044 |
| <i>age</i> ² | -0.0005*** | 0.000 | -94.49 | 0.00 | -0.001 | 0.000 |
| <i>female</i> | -0.127*** | 0.002 | -52.29 | 0.00 | -0.132 | -0.123 |
| 상수 | 4.818*** | 0.023 | 211.18 | 0.00 | 4.773 | 4.863 |
| 더미변수 | job, school, year 포함 | | | | | |

자료: 저자 작성.



표. 분위별 한계소비성향 5년 평균(1990~2016년)

| 연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모든 분위 |
|---------|------|------|------|------|------|-------|
| '90-'94 | 0.74 | 0.61 | 0.68 | 0.59 | 0.52 | 0.61 |
| '95-'99 | 0.77 | 0.69 | 0.59 | 0.57 | 0.53 | 0.62 |
| '00-'04 | 0.74 | 0.62 | 0.61 | 0.47 | 0.48 | 0.59 |
| '05-'09 | 0.71 | 0.56 | 0.53 | 0.42 | 0.39 | 0.52 |
| '10-'14 | 0.65 | 0.50 | 0.45 | 0.43 | 0.41 | 0.52 |
| '15-'16 | 0.57 | 0.67 | 0.66 | 0.40 | 0.37 | 0.49 |

자료: 저자 계산.



그림. 분위별 한계소비성향 5년 평균 추이(199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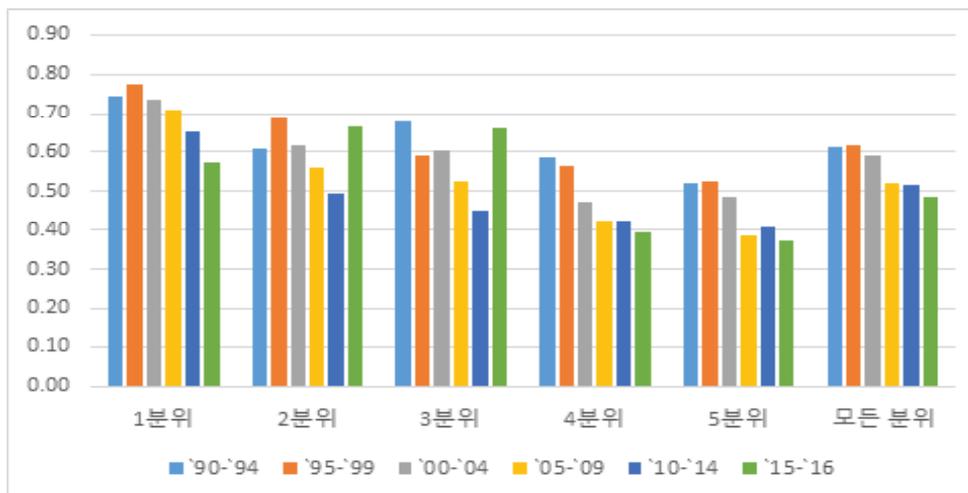




그림. 1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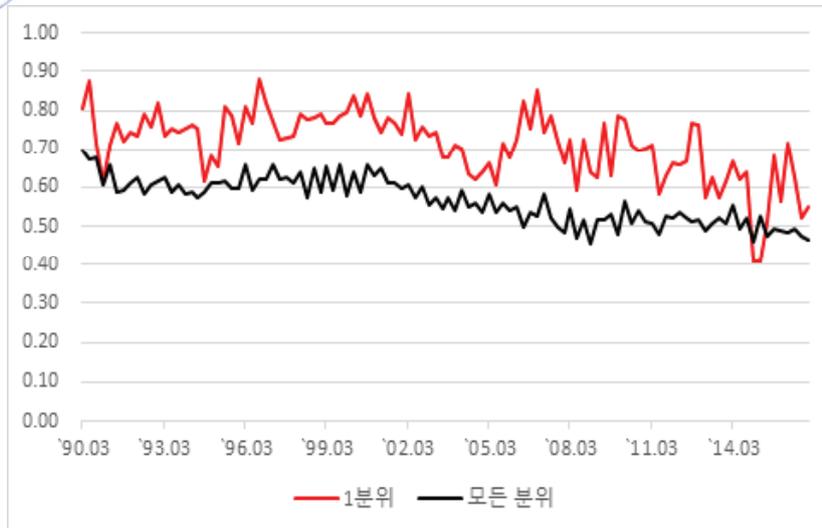


그림. 2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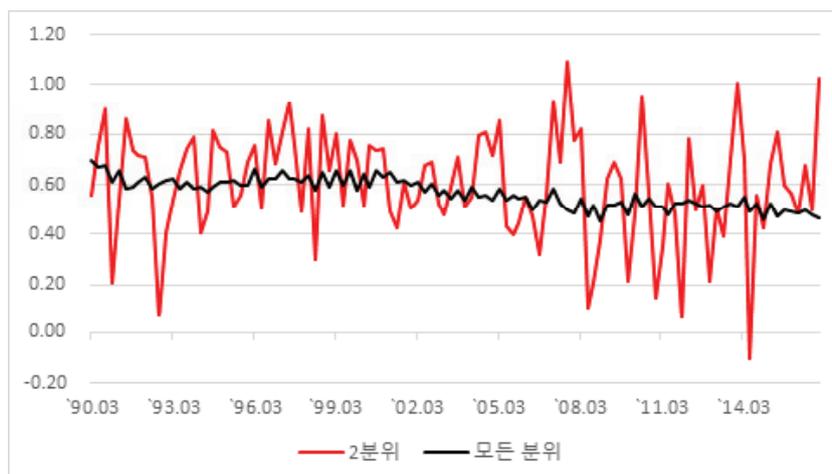




그림. 3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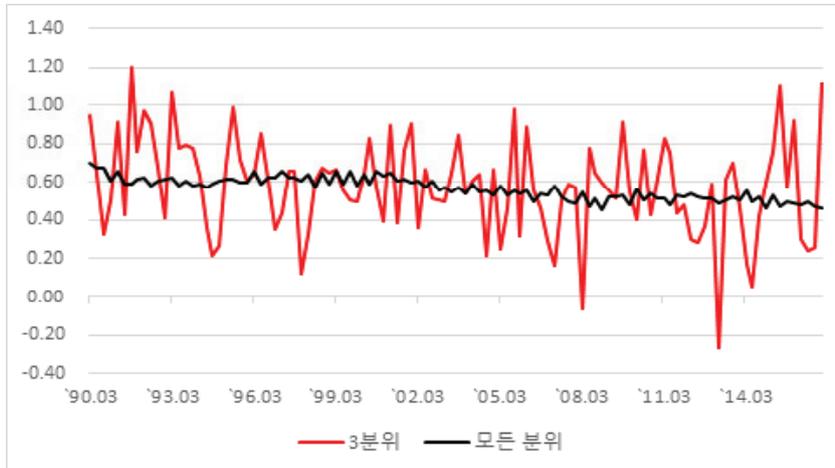


그림. 4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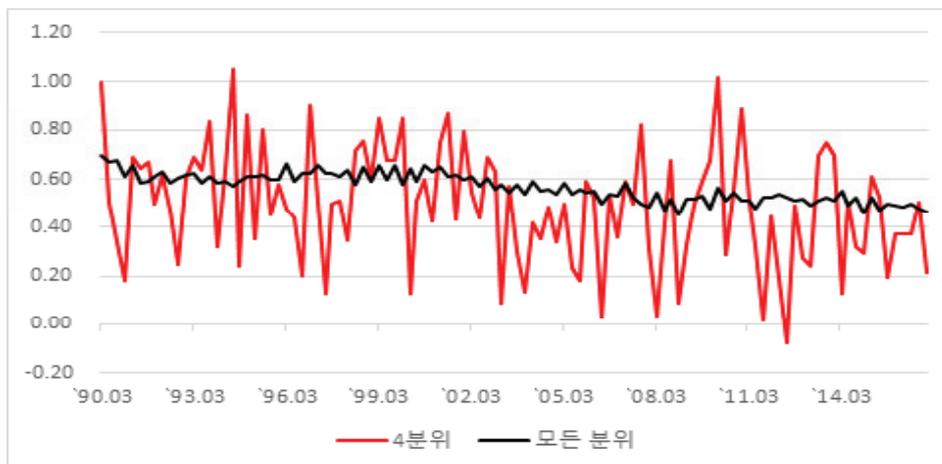




그림. 5분위의 한계소비성향 변화(1990~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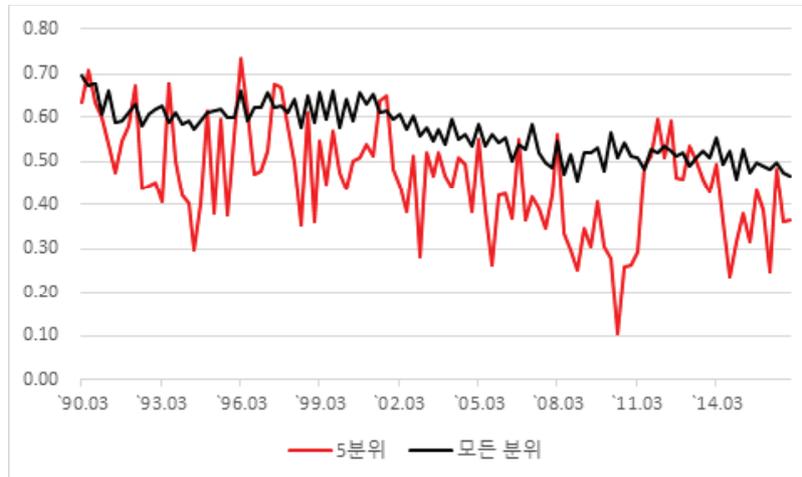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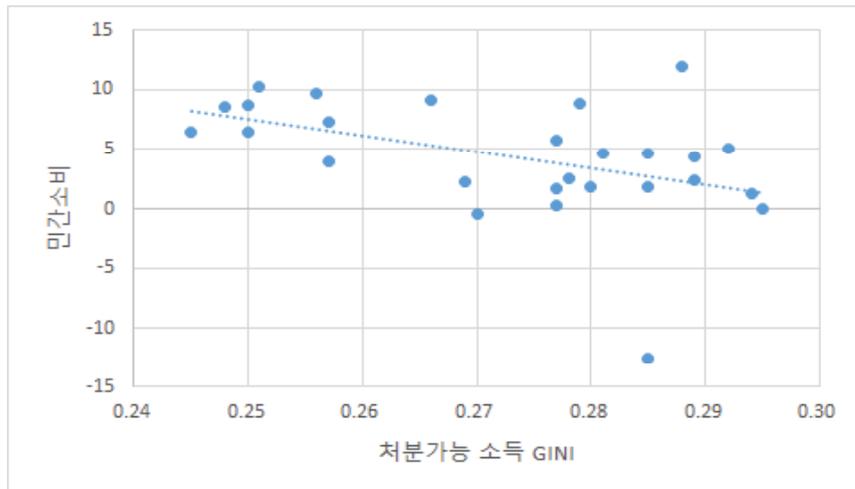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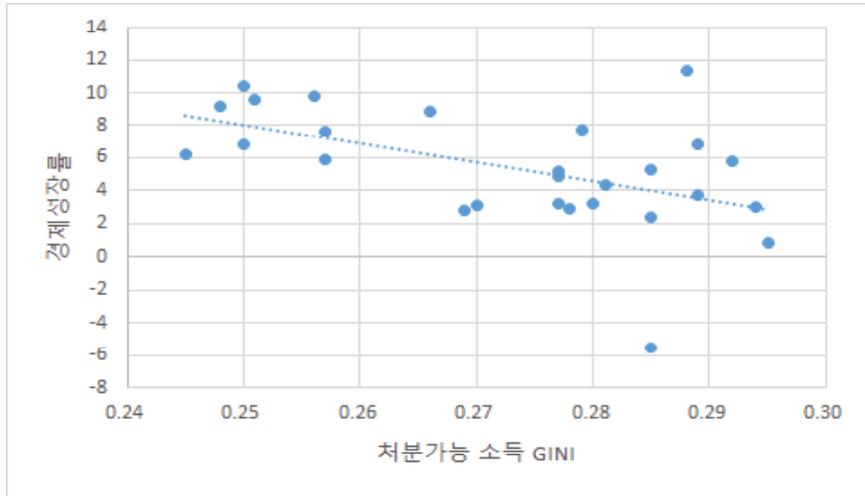
그림. 지니계수와 한국 민간소비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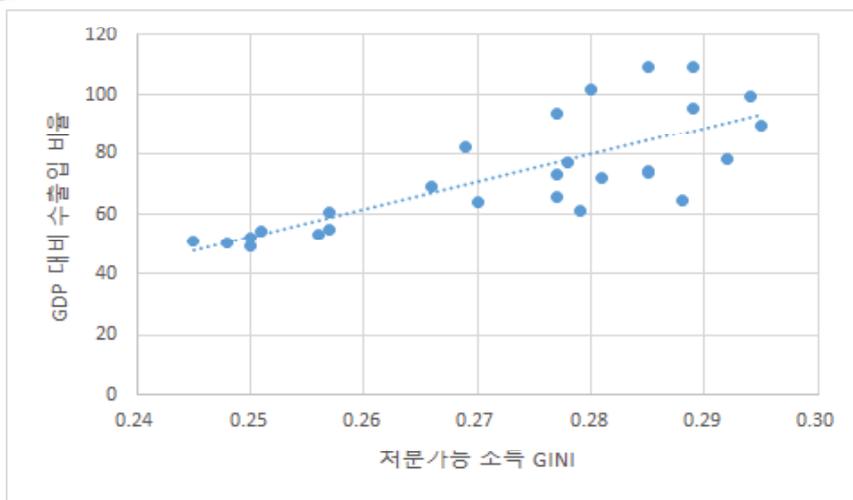
그림. 지니계수와 한국 경제성장률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그림. 지니계수와 한국 대외의존도의 관계



자료: 한국은행 ECOS, <http://ecos.bok.or.kr>,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4. 경제적 불평등과 거시경제적 영향

1. 모형분석 결과

- 소비는 소득의 함수
- 분위별 한계소비성향이 소득수준별로 차이가 있으며 1분위가 가장 높고 5분위가 가장 낮음
- 이는 불평등 심화가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

2. 지니계수와 거시경제 변수의 관계

- 지니계수와 국내소비, 경제성장률은 음의 관계, 대외의존도는 양의 관계를 보임



5. 자산가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 지난 30여년 간 평균적인 소득불평등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현상이 관찰되어왔음 (Atkinson et al., 2011; Piketty, 2014).
- 소득불평등도의 악화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그동안 분배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고 평가되던 선진국에서도 관찰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거시경제의 안정성과 경제성장 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소득불평등의 악화와 그 악영향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로 근원적인 해소책 모색 필요.
- 여기서는 자산 가격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5. 자산가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자산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모형: Tridico (2018)과 Adam and Tzamourani (2016) 모형 원용
- 34개국 OECD의 1980-2017 연간 패널 자료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델 회귀분석,
- 각국의 재정정책의 누진성(*progressiveness of fiscal policies*)에 따라 자산가격이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다양한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들을 제어하여 강건성 검증(*robustness check*)



5. 자산가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자산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모형: Tridico (2018)과 Adam and Tzamourani (2016) 모형 원용
- 추정식:

$$GINI_{i,t} = \beta_1 HP_{i,t} + \beta_2 SP_{i,t} + \beta_3 IR_{i,t} + \beta_4 INFL_{i,t} + \beta_5 UNEMP_{i,t} + \beta_6 GROWTH_{i,t} + \beta_7 GDPPC_{i,t} + \beta_8 X_{i,t} + \alpha_i + \lambda_t + \epsilon_{i,t}$$

- $i = 1, 2, \dots, 34$ 는 국가, $t = 1980, 1981, \dots, 2017$ 은 년도, HP:실질 주택가격 변화를, SP:실질 주가 변화를, IR:장기 국채 실질 이자율, INFL:물가상승률, UNEMP:실업률, GROWTH:GDP 성장률, GDPPC:1인당 GDP, X: 그외 설명변수, α 는국가 고정효과를, λ 는 년도고정효과, ϵ 는 오차항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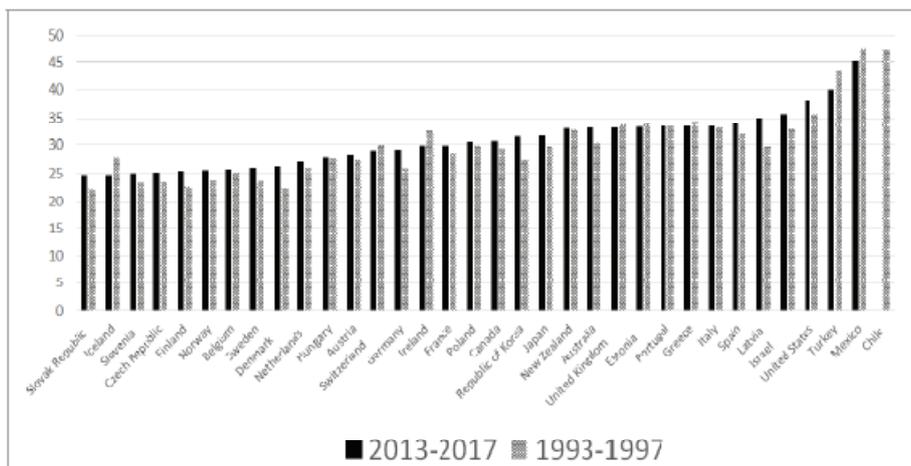


5. 자산가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 데이터: 1980-2017년의 34개 OECD 회원국 패널자료 이용 실증분석
- 주택 가격과 주식 가격: OECD 자료를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여 실질 가격으로 변환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고 1계 차분을 통해 변화율의 형태로 이용.
- 장기 국채 이자율: OECD의 장기 국채 이자율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로 보정하여 실질 이자율의 형태로 사용.
- 물가 상승률은 OECD의 CPI 인플레이션을 사용, 1인당 GDP, 실업률, 정부의 사회 지출 등도 모두 OECD의 자료 활용
- 교육 수준은 중등학교 등록비율 (secondary school enrollment ratio), 무역 개방도는 (수출+수입)/GDP를 사용했고, 두 변수 모두 World Bank)의 WDI (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자료를 이용.



그림. 선진국 34개국 지니계수



자료: Solt(2019) DB(검색일: 2019. 11. 15)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34개국의 가처분 지니, 시장 지니, 재정 정책의 누진성

| Country | Disposable Gini | Market Gini | Progressiveness Ratio |
|-------------------|-----------------|-------------|-----------------------|
| Australia | 30.82 | 48.75 | 0.48 |
| Austria | 20.6 | 44.33 | 0.66 |
| Belgium | 25.04 | 46.75 | 0.87 |
| Canada | 29.75 | 44.41 | 0.49 |
| Czech Republic | 24.03 | 43.01 | 0.79 |
| Denmark | 23.75 | 44.55 | 0.88 |
| Finland | 23.28 | 44.13 | 0.9 |
| France | 29.3 | 48.16 | 0.65 |
| Germany | 26.8 | 47.2 | 0.76 |
| Greece | 33.94 | 49.2 | 0.45 |
| Hungary | 26.07 | 48.17 | 0.85 |
| Iceland | 27.83 | 40.87 | 0.47 |
| Ireland | 31.08 | 49.86 | 0.61 |
| Italy | 32.65 | 46.84 | 0.43 |
| Japan | 29.27 | 41.01 | 0.4 |
| Republic of Korea | 29.31 | 31.77 | 0.98 |
| Mexico | 46.61 | 47.85 | 0.03 |
| Netherlands | 25.79 | 45.93 | 0.78 |
| New Zealand | 31.25 | 45.09 | 0.45 |
| Norway | 24.29 | 41.89 | 0.72 |
| Poland | 29.35 | 46.86 | 0.6 |
| Portugal | 33.78 | 52.18 | 0.54 |
| Slovak Republic | 23.67 | 40.99 | 0.75 |
| Spain | 31.69 | 45.81 | 0.45 |
| Sweden | 23.67 | 46.25 | 0.96 |
| Switzerland | 29.76 | 40.01 | 0.35 |
| Turkey | 42 | 44.91 | 0.07 |
| United Kingdom | 32.62 | 50.97 | 0.56 |
| United States | 35.74 | 47.9 | 0.34 |
| Chile | 46.82 | 51.9 | 0.11 |
| Estonia | 33.1 | 48.02 | 0.45 |
| Israel | 33.83 | 48.31 | 0.43 |
| Latvia | 32.6 | 45.75 | 0.41 |
| Slovenia | 23.54 | 39.03 | 0.66 |
| Mean | 30.23 | 45.54 | 0.58 |

자료: Solt(2019) DB(검색일 2019. 11. 15)를 바탕으로 저자 계산.



표. 전체 표본의 기초 통계량

| Variable | Obs | Mean | Std. Dev. | Min | Max |
|-----------------------------|------|----------|-----------|-----------|----------|
| GINI (disposable) | 1197 | 30.22832 | 5.995711 | 17.4 | 48.5 |
| House Price | 971 | 71.27262 | 35.40368 | 6.166281 | 173.4632 |
| Share Price | 1161 | 66.15564 | 61.64554 | 0.001477 | 657.8223 |
| Interest Rate | 932 | 5.809763 | 3.564155 | -0.362 | 22.4975 |
| Inflation Rate | 1260 | 11.26914 | 56.7482 | -4.4781 | 1281.444 |
| GDP per capita | 1219 | 24918.5 | 13451.18 | 2400.824 | 83081.13 |
| Growth | 1185 | 0.046608 | 0.036749 | -0.26505 | 0.301944 |
| Unemployment Rate | 1001 | 7.778702 | 3.964803 | 1.558333 | 27.49167 |
| Trade Openness | 1236 | 75.04721 | 37.23958 | 16.01388 | 226.0414 |
| Credit to GDP | 943 | 87.40339 | 49.34489 | 0.1858704 | 308.98 |
| Social Spending | 1144 | 18.56769 | 6.297707 | 1.649 | 34.178 |
| Secondary School Enrollment | 1147 | 100.3929 | 17.91641 | 37.56353 | 163.9347 |

자료: 저자 계산.





표. 약한 누진성(Progressive ratio<0.518) 표본의 기초 통계량

| Variable | Obs | Mean | Std. Dev. | Min | Max |
|-----------------------------|-----|----------|-----------|----------|----------|
| GINI (disposable) | 564 | 34.04592 | 5.763378 | 24.6 | 48.5 |
| House Price | 416 | 72.67997 | 35.16461 | 8.233083 | 173.4632 |
| Share Price | 528 | 68.13691 | 78.76856 | 0.001477 | 657.8223 |
| Intorost Rato | 372 | 6.068439 | 3.523838 | -0.06917 | 16.90917 |
| Inflation Rate | 556 | 10.65182 | 27.75824 | -1.35284 | 373.2157 |
| GDP per capita | 538 | 23008.96 | 12482.55 | 2400.824 | 63938.96 |
| Growth | 524 | 0.046786 | 0.040916 | -0.26505 | 0.213651 |
| Unemployment Rate | 426 | 7.665286 | 4.186576 | 2.008333 | 26.11667 |
| Trade Openness | 557 | 58.57698 | 28.78195 | 16.01388 | 170.4283 |
| Credit to GDP | 459 | 95.46726 | 54.04468 | 11.20776 | 308.9863 |
| Social Spending | 513 | 14.79177 | 5.394357 | 1.725 | 28.481 |
| Secondary School Enrollment | 474 | 95.19198 | 15.77032 | 45.26966 | 157.1677 |

자료: 저자 계산.



표. 강한 누진성(Progressive ratio ≥ 0.518) 표본의 기초 통계량

| Variable | Obs | Mean | Std. Dev. | Min | Max |
|-----------------------------|-----|----------|-----------|----------|----------|
| GINI (disposable) | 564 | 34.04592 | 5.763378 | 24.6 | 48.5 |
| House Price | 416 | 72.67997 | 35.16461 | 8.233083 | 173.4632 |
| Share Price | 528 | 68.13691 | 78.76856 | 0.001477 | 657.8223 |
| Interest Rate | 372 | 6.068439 | 3.523838 | -0.06917 | 16.90917 |
| Inflation Rate | 556 | 10.65182 | 27.75824 | -1.35284 | 373.2157 |
| GDP per capita | 538 | 23008.96 | 12482.55 | 2400.824 | 63938.96 |
| Growth | 524 | 0.046786 | 0.040916 | -0.26505 | 0.213651 |
| Unemployment Rate | 426 | 7.665286 | 4.186576 | 2.008333 | 26.11667 |
| Trade Openness | 557 | 58.57698 | 28.78195 | 16.01388 | 170.4283 |
| Credit to GDP | 459 | 95.46726 | 54.04468 | 11.20776 | 308.9863 |
| Social Spending | 513 | 14.79177 | 5.394357 | 1.725 | 28.481 |
| Secondary School Enrollment | 474 | 95.19198 | 15.77032 | 45.26966 | 157.1677 |

자료: 저자 계산.



표. 기본모형 추정 결과

| | Full Sample | Subsample 1: Low Progressiveness | Subsample 2: High Progressiveness |
|---------------------|------------------------|-------------------------------------|--------------------------------------|
| △(Real House Price) | -0.621 (-1.132) | 2.787** (-1.078) | -0.373 (-1.639) |
| △(Real Share Price) | -0.097 (-0.321) | -0.109 (-0.289) | 0.104 (-0.374) |
| Real Interest Rate | -0.1 (-0.06) | 0.042 (-0.069) | -0.11 (-0.094) |
| Inflation | -0.064 (-0.091) | 0.099 (-0.084) | 0.013 (-0.107) |
| Unemployment Rate | 0.033 (-0.051) | 0.172** (-0.061) | -0.011 (-0.059) |
| GDP growth | 1.036 (-1.542) | 0.591 (-1.71) | 4.072* (-2.089) |
| GDP per capita | -4.392* (-2.39) | 2.451 (-2.316) | -4.731 (-3.046) |
| Constant | 76.530*** (-25.753) | 6.294 (-24.998) | 69.965** (-28.298) |
| Observations | 726 | 309 | 417 |
| R-squared | 0.498 | 0.765 | 0.338 |
| Number of ccode | 34 | 15 | 21 |

주: 1) 모든 추정에는 국가고정효과와 연도고정효과가 고려되었음.
 2) 서브 샘플은 Progressiveness ratio < 0.518인 경우 누진성이 약한 국가로, 나머지는 누진성이 강한 국가로 분류하였음.
 3) 괄호 안의 숫자는 robust standard error임.
 자료: 저자 계산.



5. 자산가격과 소득불평등의 관계

분석결과

- ▶ 전체 표본에서는 주택 가격, 주식 가격, 이자율 모두 유의한 효과가 없었고, 1인당 GDP 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가 추정됨. 즉 전체 샘플에서는 1인당 소득 수준이 상승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되는 효과만이 관찰됨
- ▶ 누진성이 약한 표본에서는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과 실업률 모두 5% 수준에서 유의하게 소득불평등도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이 소득불평등 악화의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분석됨
- ▶ 누진성이 강한 표본에서는 두 변수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 소득불평등 완화는 쿠즈네츠 곡선의 주장과 달리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자연적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재정정책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시사.



6. 요약 및 결론

- ▶ 소득 불평등도 증가는 사회적 불안요인일 뿐 아니라 소비감소, 성장감소, 대외의존도 증가 등 거시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야기.
- ▶ 재정정책의 적극적 개입없이 부동산 가격과 실업은 소득불평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 우리나라는 재정정책의 누진성이 약하여 시장소득의 조정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지 못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불평등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과 사회안전망 강화,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필요



[발표 3]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2020. 12. 2.

주 병 기
(서울대)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2020년 12월 2일

주 병 기

서울대 경제학부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http://cdj.snu.ac.kr>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http://cdj.snu.ac.kr>

불평등과 기회불평등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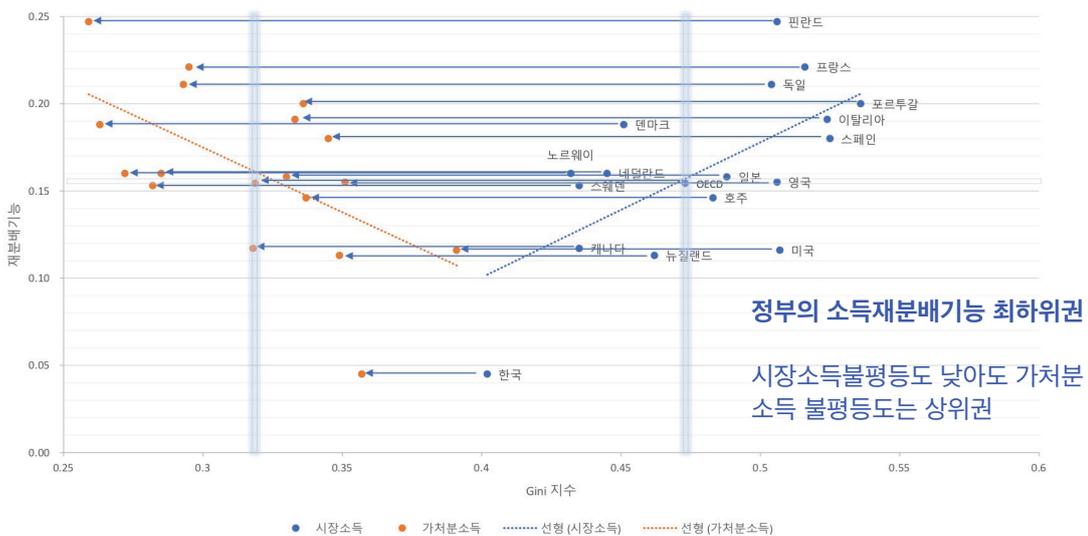
-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취약
 -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
 - GDP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 9.6%(2012년) vs OECD평균 21.6%
- 평균수명 연장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
- 근로소득 불평등
 -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중위 근로소득의 2/3미만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 과 상위근로소득/최하위근로소득 비율 모두 OECD 최상위권)
 - 낮은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조업 대비 50% vs OECD 평균 85%)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 부패와 불공정경제
 - 후진적 족벌 경영과 사익 편취가 지배하는 시장질서 -> 재벌개혁 시급한 과제
 - 혁신적 기업이 정신과 전문 경영인 양성이 활성화되는 선진적 시장으로 전환
 - 비정상적인 공공부문의 감시, 감독기능: 공정거래, 금융감독, 세무행정, 노동, 산업안전
 - 정치, 공공부문과 시장의 부패한 가치사슬: 피감기관/관련업체 재취업, 법조계/금융계 등 전관예우, 낙하산 인사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의 문제

- 낮은 가계소득(국민소득 대비)과 높은 가계부채
- 출산과 육아, 보육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와 경제: 제도의 불완전, 제도가 있어도 강제되지 못하는 문제 (여성 차별과 경력단절)
- 일과 복지의 불균형. 장시간 근로와 높은 직무부담
-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업안전 문제
 - 산업재해 사망률 1위와 평균 노동시간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들 중에서
 - 소득양극화도 최상위권: 차상위소득/최하위소득, 저임금근로자 비율,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중소기업/대기업 임금격차 등
 -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 표출 차단. 매우 낮은 노동조합 가입률

3

정부 소득재분배기능 비교



자료: OECD stat 최신년
한국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정부 소득재분배기능

General government spending Total, % of GDP, 2018 or latest avail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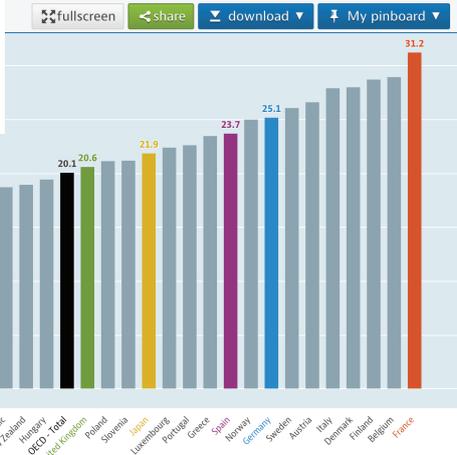
Source: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정부지출규모 과소

- 31.1%로 OECD 최하위권
- OECD 중복지-중부담 국가들의 약 40%와 큰 격차

Source: Social Expenditure: Aggregated data



사회복지지출 비중 과소

- 11.1%로 OECD 최하위권
- 평균 20.1%의 절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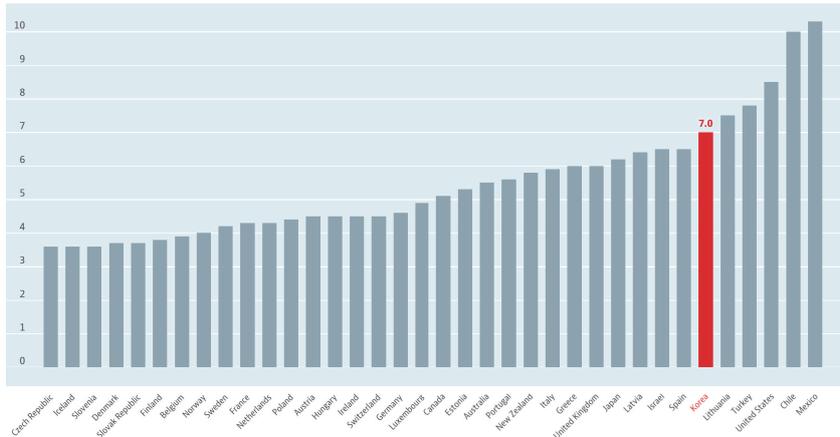
급속한 불평등도 상승: 90년대중엽 ->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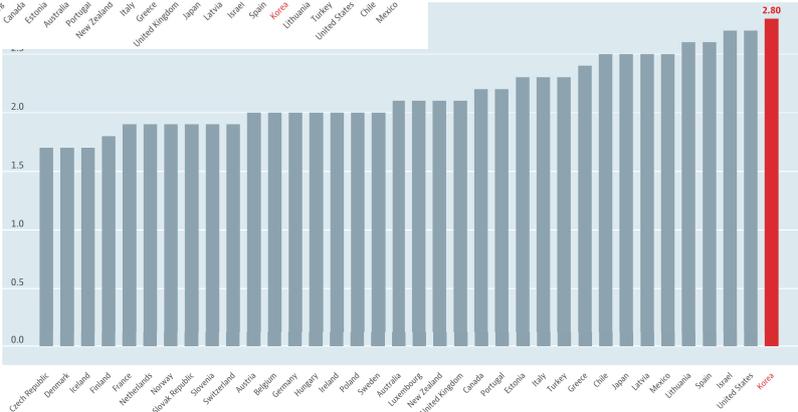
지난 20년간 가장 급속히 악화된 불평등!
비교적 평등한 사회에서 매우 불평등한 사회로

자료: OECD stat 최신년, World Inequality Database
한국 90년대 중반은 김낙년(2013), 최신년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소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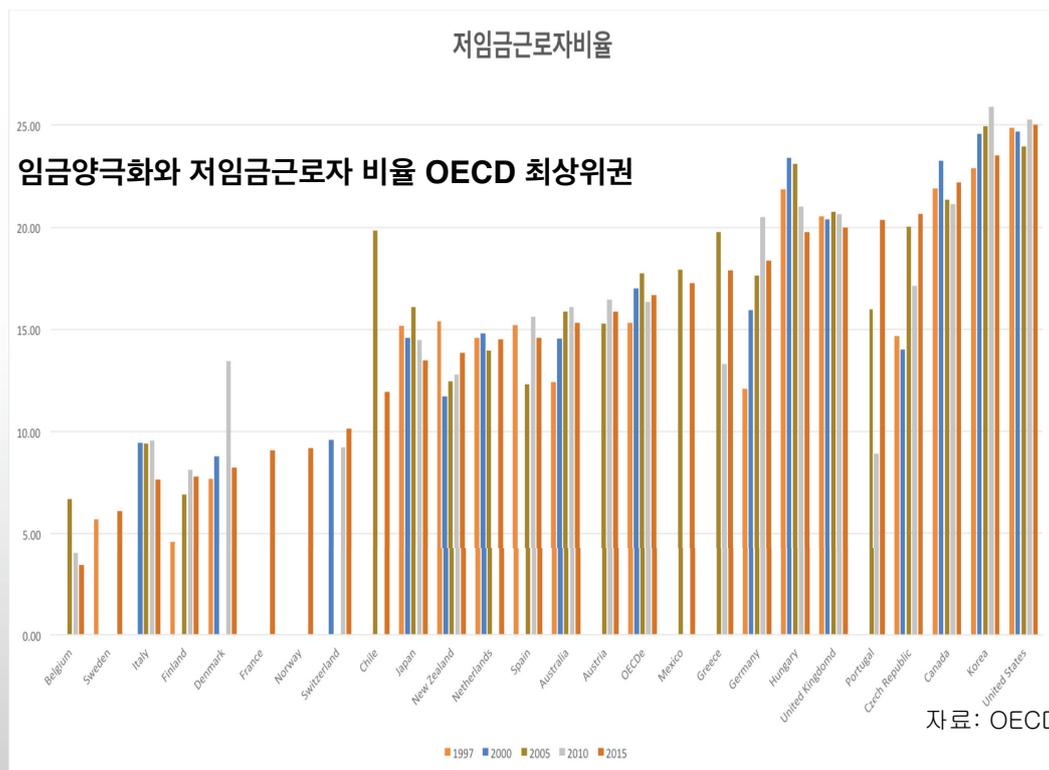


Income Inequality, **S50/S10** quintile share, 2017 or latest available
 Source: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
 OECD (2019), Income inequality (indicator). doi: 10.1787/459aa7f1-en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http://cdj.snu.ac.kr>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임금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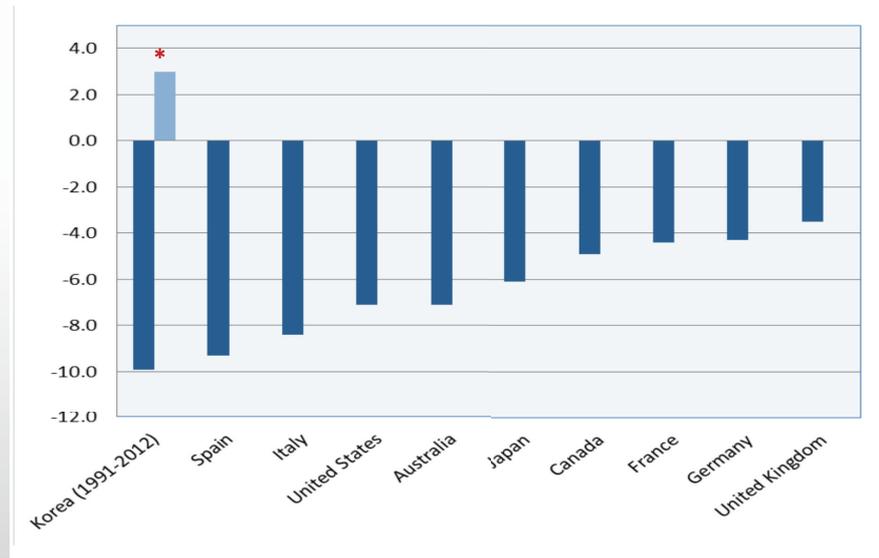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와 불평등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자 포함)

- 모든 선진국에서 노동 소득 분배율 하락
- 한국 가장 큰 하락
- > 한국 불평등도 가장 큰 폭 상승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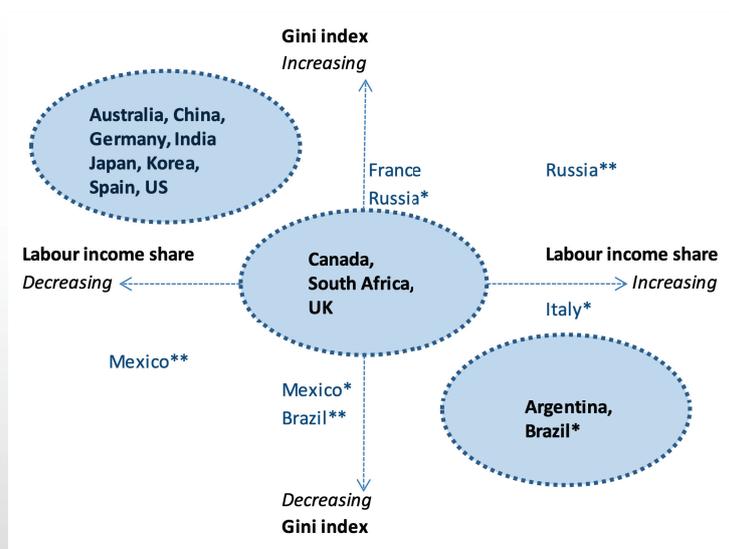
Panel A. Advanced economies 1970-2014



자료: OECD 2015

노동소득분배율, 불평등, 경제성장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노동 소득분배율과 불평등도는 부의 관계로 변화해왔음.
-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에 따른 총수요 위축 효과 (민간 투자, 정부지출과 공공투자 감소) -> G20 선진국에서 일반적인 현상.
- 장기적으로 성장률 감소 (ILO and KIEP,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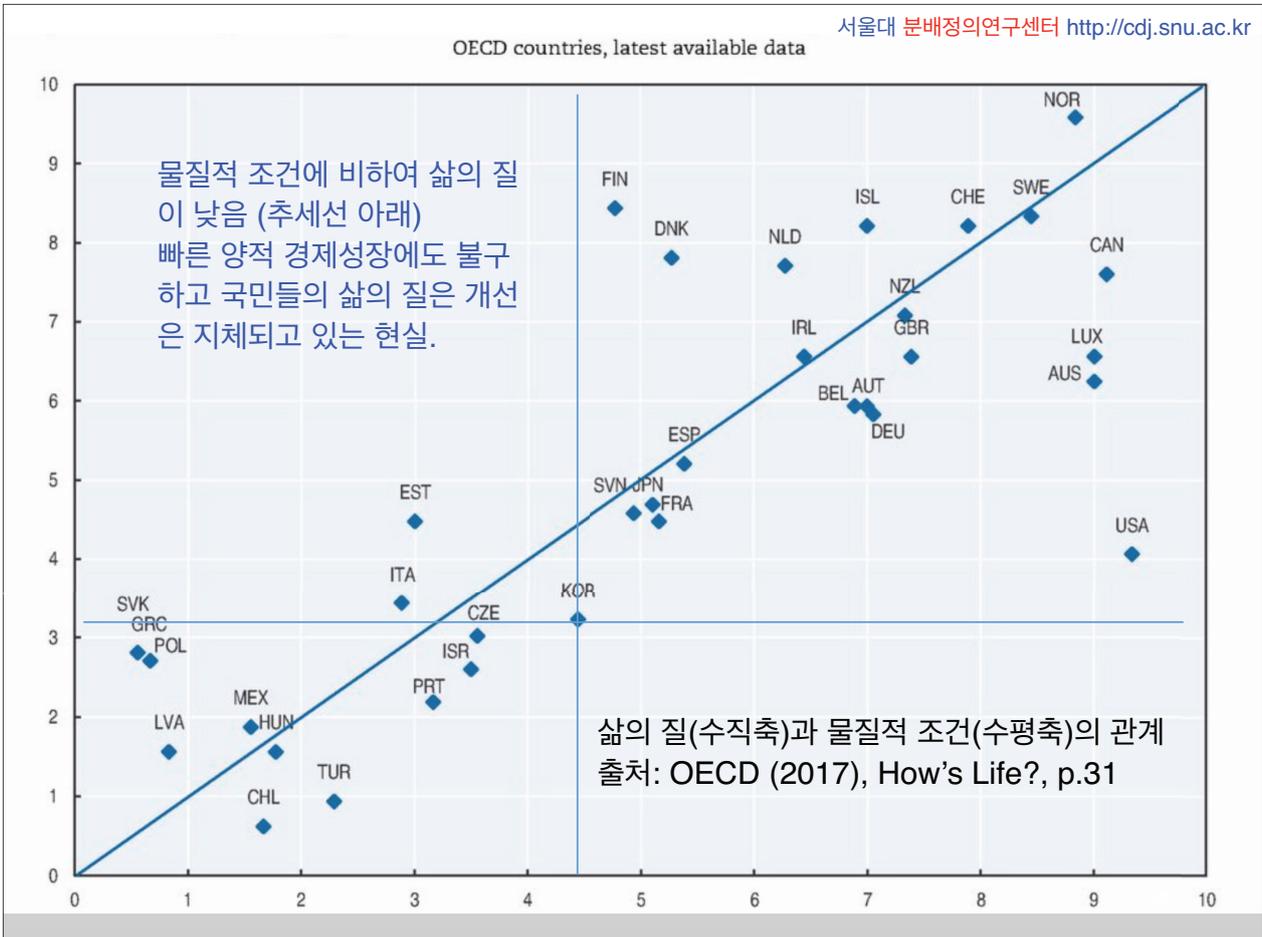


자료: OEC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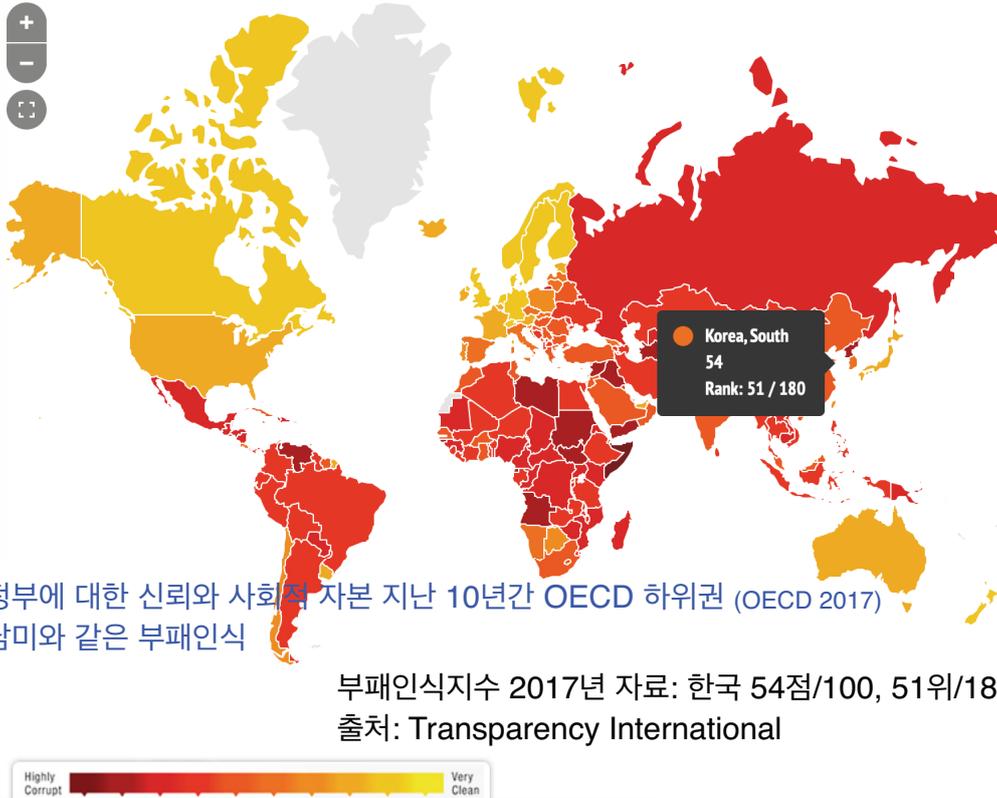
삶의 질과 사회적 신뢰의 문제

- 낮은 가계소득(국민소득 대비)과 높은 가계부채
- 출산과 육아, 보육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와 경제: 제도의 불완전, 제도가 있어도 강제되지 못하는 문제 (여성 차별과 경력단절)
- 일과 복지의 불균형. 장시간 근로와 높은 직무부담
- 열악한 근로환경과 산업안전 문제
 - 산업재해 사망률 1위와 평균 노동시간 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들 중에서
 - 소득양극화도 최상위권: 차상위소득/최하위소득, 저임금근로자 비율, 비정규직/정규직 임금격차, 중소기업/대기업 임금격차 등
 -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 표출 차단. 매우 낮은 노동조합 가입률

11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7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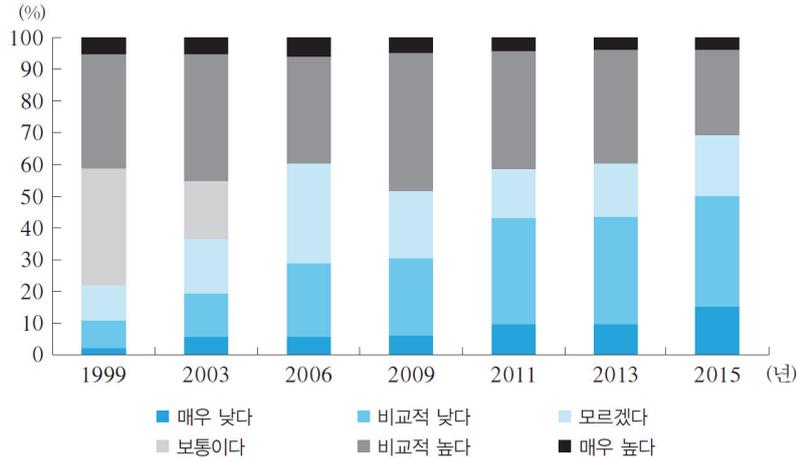
51위 (2017) -> 39위 (2019)로 개선
여전히 OECD 선진국 최하위권.
칠레와 대만 보다 낮은 점수.



기회불평등의 문제

세대 간 계층상승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급속히 증가함; 기회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 팽배

그림 6-5 가구주의 세대 간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연도별 변화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 가구향상소득의 기회불평등 장기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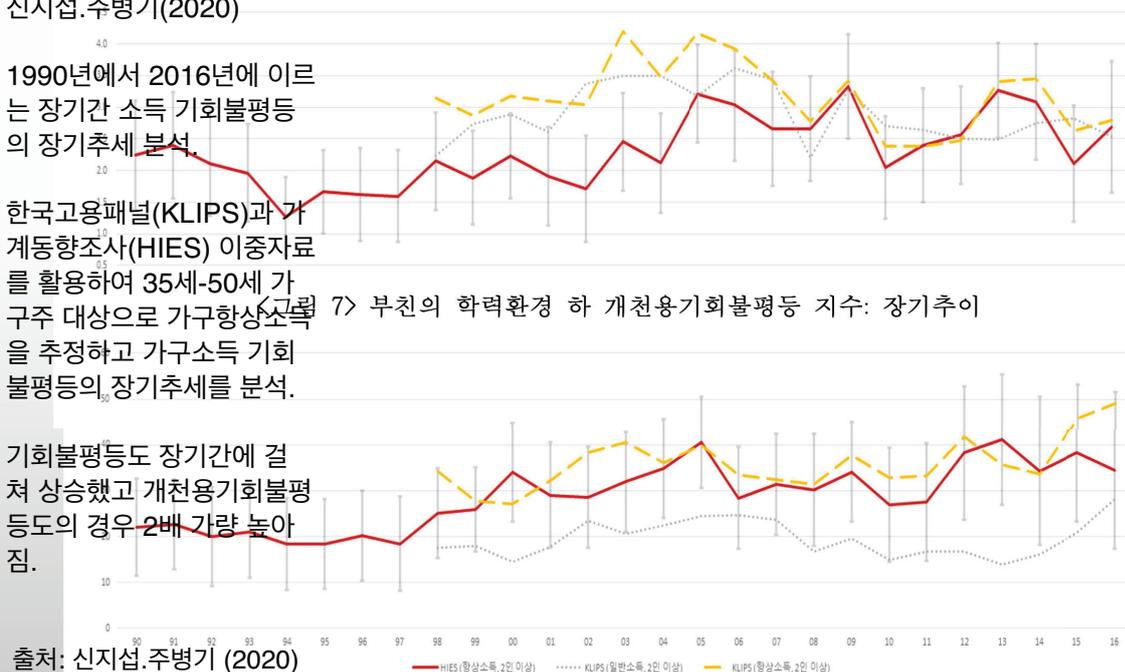
<그림 4> 부친의 학력환경 하 지니기회불평등 지수: 장기추세

신지섭.주병기(2020)

1990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장기간 소득 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 분석

한국고용패널(KLIPS)과 가계동향조사(HIES) 이중자료를 활용하여 35세-50세 가구 대상으로 가구향상소득을 추정하고 가구소득 기회불평등의 장기추세를 분석.

기회불평등도 장기간에 걸쳐 상승했고 개천용기회불평등도의 경우 2배 가량 높아짐.



출처: 신지섭.주병기 (2020)

— HIES (향상소득, 2인 이상) KLIPS (일반소득, 2인 이상) — KLIPS (향상소득, 2인 이상)

한국 가구항상소득의 기회불평등 장기추세

<표 10> 주요 기간 별 지나기회불평등 지수의 비교

| | 연도 수 | 평균 | 표준편차 | 하한* | 상한* | Mean difference test |
|-----------|------|-------|------|-------|-------|--|
| GOI(9497) | 4 | 1.575 | .073 | 1.343 | 1.807 | $H_0 : GOI(9497) - GOI(9801) = 0$ $t : -4.3224$ |
| GOI(9801) | 4 | 2.033 | .076 | 1.788 | 2.277 | |
| GOI(1316) | 4 | 2.739 | .273 | 1.870 | 3.610 | $H_0 : GOI(9801) - GOI(1316) = 0$ $t : -2.4878$ |

* 95% 신뢰구간

<표 13> 주요 기간 별 개천용기회불평등 지수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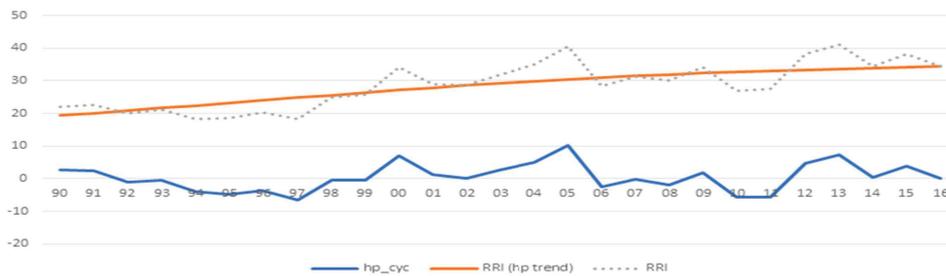
| | 연도 수 | 평균 | 표준편차 | 하한 | 상한 | Mean difference test |
|-----------|------|-------|-------|-------|-------|--|
| RRI(9497) | 4 | 17.96 | .236 | 17.21 | 18.72 | $H_0 : RRI(9497) - RRI(9801) = 0$ $t : -5.4952$ |
| RRI(9801) | 4 | 27.62 | 1.740 | 22.07 | 33.15 | |
| RRI(1316) | 4 | 39.52 | .894 | 36.68 | 42.37 | $H_0 : RRI(9801) - RRI(1316) = 0$ $t : -6.08$ |

주: 95% 신뢰구간

출처: 신지섭.주병기 (2020)

한국 가구항상소득의 기회불평등 장기추세

<그림 8> 부친의 학력 환경 하 개천용기회불평등 지수 추이: 순환 변동 분리



주: RRI(hp trend)와 hp_cyc는 각각 개천용기회불평등 지수 장기추이(RRI)에 hp filtering을 적용하여 분리한 추세와 순환 변동을 의미함.

<표 14> 기회불평등 지표 연도별 증감 검정

| 개천용기회불평등 지수 | | | |
|-------------|-------------|-------------|----|
| | coefficient | t-statistic | n |
| year | 0.8450*** | 8.65 | 27 |
| intercept | 17.38*** | 11.11 | 27 |

주: coef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회불평등 지수를 선형추세 가정 하에 연도변수로 회귀한 값을 의미함.

출처: 신지섭.주병기 (2020)

최소 학력 조건부 기회불평등도 장기추세

신지섭.주병기(2020) <그림 9> 최소학력 조건부 부친의 학력환경 하 지니기회불평등 지수 (HIES)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기회불평등도가 크게 낮아지고 이러한 학력의 영향은 최근으로 올 수록 커짐.

개천용기회불평등도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조건 하에서도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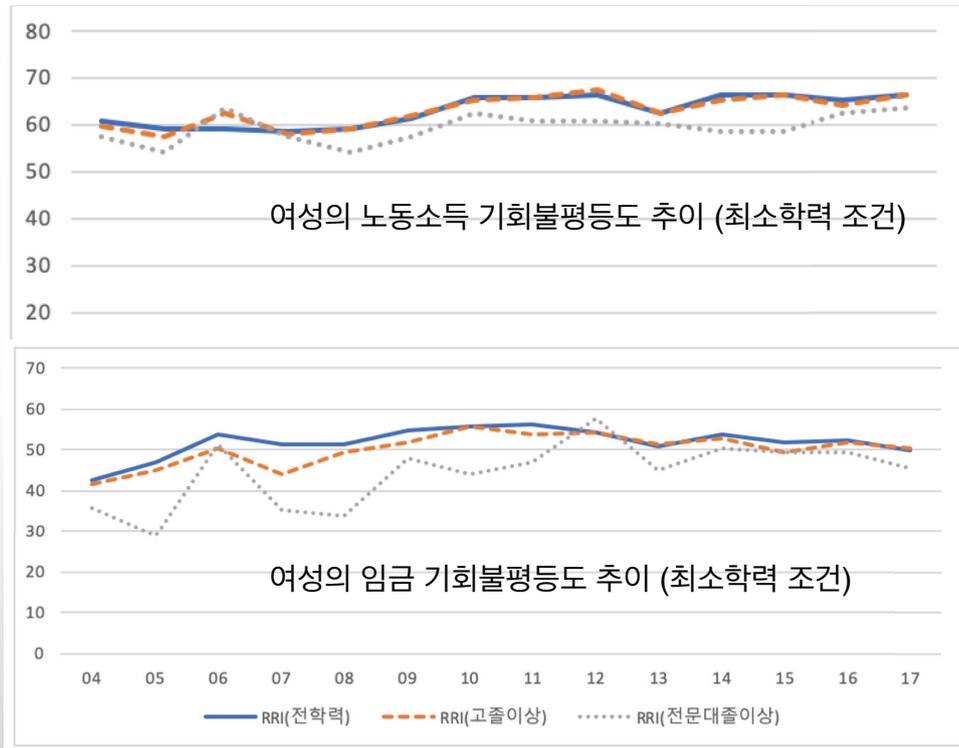
부친의 학력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소득기회불평등의 상당부분이 설명됨. 대학교육 조건하에서도 개천용기회불평등이 여전히 상승하는 것은 대학진학률이 높아져, 대학진학자체보다 상위권 대학 진학이 갈수록 중요해짐을 나타냄.



출처: 신지섭.주병기 (2020)

성별 소득 기회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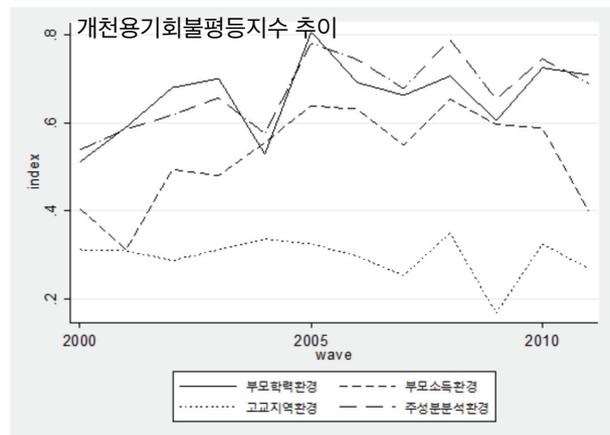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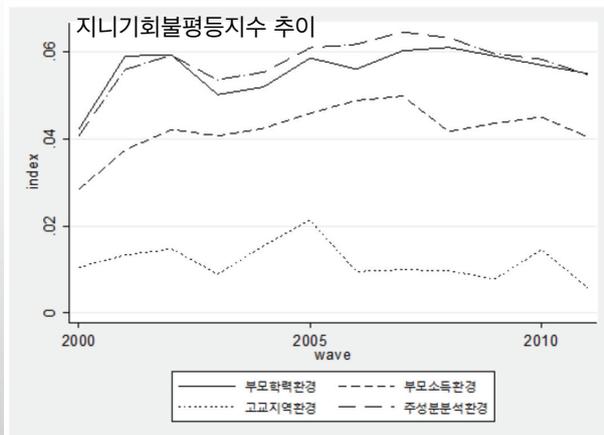
- 한국노동패널(KLIPS)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성별 기회불평등은 노동소득과 임금 모두 조사기간 중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냄
- 개천용불평등지수 값이 각각 66%와 50%에 가까운 높은 값을 가지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노동소득 만을 기준으로 이와 같이 높은 기회불평등이 나타나는 것은 성별 경제적 기회불평등의 심각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 최소학력조건이 기회불평등도를 낮추기는 하나 앞서의 계층간 기회불평등도와 달리 그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소득의 경우 전문대졸이상의 여성이 겪는 개천용불평등도는 여전히 60%이상으로 전학력의 개천용불평등도와 큰 차이가 없는 매우 높은 수준임.
 - 임금도 마찬가지
 - 대학교육의 영향, 최근에 이를수록 감소하는 추세
- 성별 기회불평등도를 낮추는데 학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그 정도는 크지 않아 성별 기회불평등도는 교육을 통해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차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음.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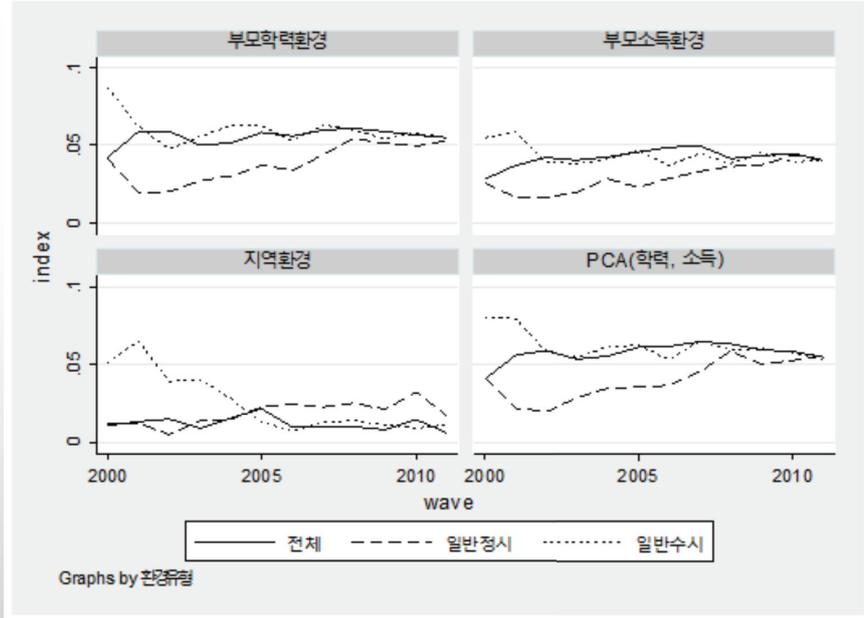
대학입학성과의 기회 불평등 추이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자료 (GOMS) 분석: (오성재, 주병기, 2020)
- 5개 군으로 대학 분류: 최상위 군은 최상위 5개 대학과 의약학전공.
- 부모소득과 학력을 이용한 주성분분석 가구환경으로 저, 중, 고의 3개 계층 구분
- 두 지수모두 기회불평등도 상승추세
- 개천용기회불평등도 70%에 육박. 수능성적과 학력평가자료에서 보다 높은 기회 불평등도
- 지역 간 기회불평등도는 낮은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됨.
- 여성이 남성보다 지역 간 기회불평등도 더 큼.



대학입학성과의 기회 불평등, 입시전형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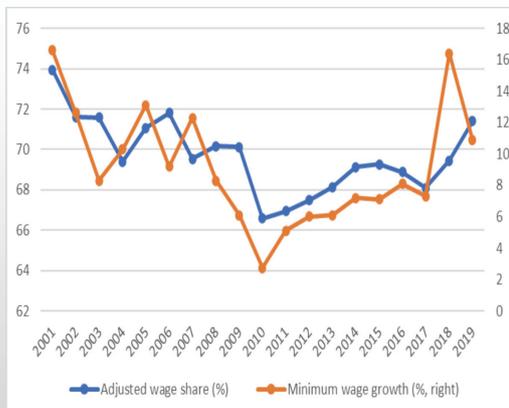
- 정시전형의 기회불평등도가 수시전형보다 낮게 나타남.
- 정시전형의 기회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두 전형 간의 기회불평등도 격차는 점차 줄어들었음.
- 지역 간 기회불평등의 경우 정시가 더 높음 (수시의 지역격차 해소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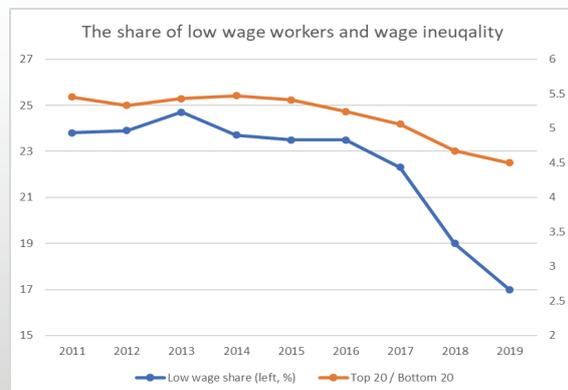
23

최근 분배 동향

- 2017-19: 노동소득분배율 상승 (최저임금 급상승과의 관련성?)
- 임금불평등, 저임금노동자 비율 하락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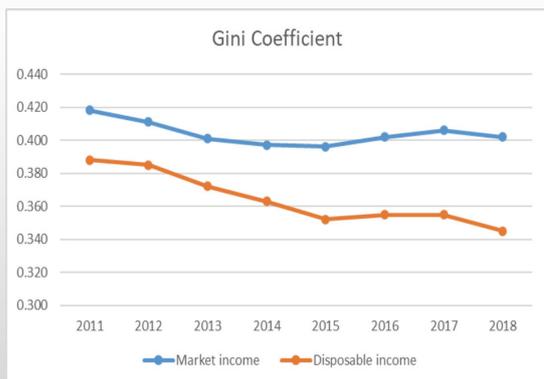


자료: Kim (2020), Statistics Korea, 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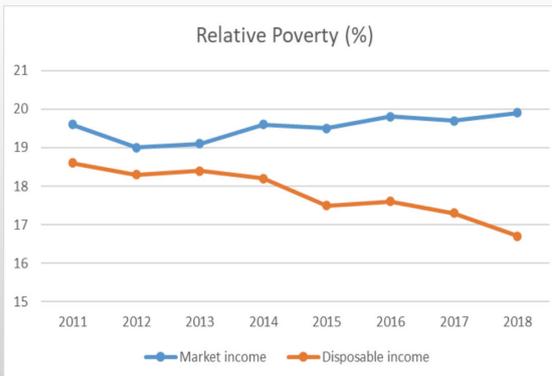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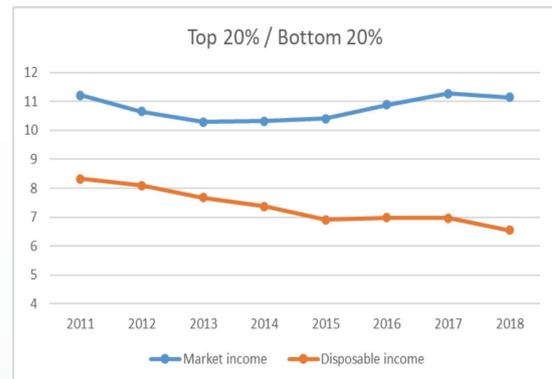
24

최근 분배 동향

- 2017-18: 소득 양극화, 불평등 개선
- 상대빈곤 하락
- 정부의 재분배 기능 강화의 영향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2019)



25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정부지출 비중 (31.1%, 2018년) OECD 최하위권 -> 중복지-중부담 국가수준(40%)
 - 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최하위권 (11.1%) -> OECD 평균 (20.1%)
 - 국민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높여야만 가능. 엄정한 세무 감시/감독과 조세정의 실현.
- 경제적 기회평등과 사회계층 이동성 제고 방안
 - 경제활동을 통한 세대내, 세대간 계층이동성 제고
 -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 경제민주화: 창업과 혁신을 통한 기업성장이 가능한 시장질서, 상생협력과 재도전의 기회
 -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역할 강화: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노동시장 격차 해소
 - 교육을 통한 세대 내, 세대 간 계층이동성 제고
 - 교육 격차해소
 - 재교육 기회확대, 경력 고졸자의 대학교육연수 기회확대

26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

- 임금격차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 고용복지 개선이 시급한 과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준수 강제.
 -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준수 강화를 병행
 -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 택배노동과 같이 장시간 노동이 강요되는 시장 -> 협상력의 불균형 해소
 -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들의 협상력 강화 (노동자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권리의 확대)
- 공정경제를 통한 선진적 시장질서 확립: 재벌 개혁
- 교육격차 해소 방안
 - 초중등교육 상향 평준화: 사교육 비중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
 - 고등교육에서의 계층간 기회불평등 해소 (국립대학 중위소득 이하의 기회균형 선발, 지역 인재 균형 선발 대폭 강화 -> 지역 공공부문과 공기업의 지역인재선발과 연계 강화)
 -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입학생의 지역과 계층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다양성을 보상하는 국비 장학금 혹은 연구지원 등)

27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http://cdj.snu.ac.kr>

참고문헌

- 김낙년 (2013),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 김영철 (2011), “고등교육 진학단계에서의 기회형평성 제고방안”,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1-06.
- 김희삼 (2009), “한국사회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9-3.
- 신지섭·주병기 (2020), “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 장기추세에 대한 연구”,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 오성재·강창희·정혜원·주병기 (2016), “가구환경과 교육성취의 기회: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이용한연구”, 『재정학연구』, 9(4), 1-32.
- 오성재·주병기 (2017), “한국의 소득 기회불평등에 관한 연구”, 『재정학연구』, 10(3), 1-30.
- 오성재·주병기 (2020), “대학입학 성과에 나타난 교육 기회불평등과 대입 전형에 대한 연구”,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
- 주병기 (2018), “소득과 교육의 기회불평등”, 『분배적 정의와 한국사회의 통합』 (김성진외 저), 제6장, 율곡출판사.
- Aghion, P., E. Caroli, C. Garcia-Penalosa (1999),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The Perspective of the New Growth Theori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7, 1615-1660.
- Barro, R.J. (1990),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5), pp. 103-25.
- Benabou, Roland (1996), “Inequality and Growth”, *NBER Macroeconomics Annual*, 11, 11-74.
- _____, 2002, “Tax and Education Policy in a Heterogeneous-Agent Economy: What Levels of Redistribution Maximize Growth and Efficiency?” *Econometrica*, Vol. 70(2), pp. 481-517.
- Benhabib, J. (2003), “The Tradeoff Between Inequality and Growth,” *Annals of Economics and Finance*, Vol. 4(2), pp. 491-507.
- Berg, A., J.D. Ostry, C.G. Tsangarides, Y. Yakhshilikov (2018),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new evidence,” *Journal of Economic Growth*, 23, 259-305.
- Chetty, R., N. Hendren, O. Kline and E. Saez (2015), *The Economic Impacts of Tax Expenditures: Evidence from spatial variation across the US*. Mimeo
- Credit Suisse (2014), *Global Wealth Databook*
- Denk, O. and A. Cazenave Lacrouz (2015), “Household Finance and Income Inequality in the Euro Area”,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226, OECD Publishing, Paris
- Easterly, W. (2007), “Inequality does cause underdevelopment: Insights from a new instru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4, 755-776.

28

참고문헌

- Lefranc, A., N. Pistoiesi and A. Trannoy (2008), “Inequality of Opportunities vs. Inequality of Outcomes: Are Western Societies all Alik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4.4, 513-546.
- _____ (2009), “Equality of Opportunity and Luck: Definitions and Testable Conditions, with an Application to Income in Fra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3, 1189-1207.
- OECD (2014), *OECD Framework for Inclusive Growth*, OECD Publishing.
- OECD (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OECD Publishing.
- OECD (2016): *Education at a Glance*, , OECD Publishing.
- OECD (2017a): *Education at a Glance*, , OECD Publishing.
- OECD (2017b), *Bridging the Gap: Inclusive Growth 2017 update Report*, OECD Publishing.
- Ostry, J.D., A. Berg, C.G. Tsangarides (2014),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 Piketty, T. (2014), *Capital in the 21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 Rodrik, D. (1999), “Where Did All the Growth Go? External Shocks, Social Conflict, and Growth Collapse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4(4), pp. 385–412.
- Saint-Paul, G., and T. Verdier (1993), “Education, Democracy and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42(2), pp. 399–407.
- _____ (1997), “Power, Distributive Conflicts, and Multiple Growth Paths,” *Journal of Economic Growth*, Vol. 2(2), pp. 155–68.
- Tanzi, V., & Zee, H. (1997). *Fiscal policy and long-run growth*. IMF Staff Papers, 44(2), 179–209.
- Todaro, Michael (1997), *Economic Development*.
- ILO; 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2015). *Inequality in G20 countries: Causes, impacts and policy responses*, Note prepared for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July.
- ILO; OECD, 2015. *The labour share in G20 economies*, Report prepared for the G20 Employment Working Group.

